

제43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소위원장 유상범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결산에 대해 2건의 보류 사항을 제외하고 의결하였으나 추가로 심사할 건이 1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준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농해수위 소관 부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께서는 어제 이미 인사를 하셨으니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소위 자료 5권 83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재외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 105억 3900만 원 중 20억 48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인력운영경비에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예산의 불용 원인을 세부 비목별로 분석하고 향후 궐위선거 등 긴급한 선거에서도 실제 파견기간,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정부 의견……

○소위원장 유상범 미안합니다, 그사이에 잊어 먹었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 의견인 주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재외선거관리 예산의 정교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겹쳐히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궐위선거 등 예비비 소요 발생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주의라고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상범 의견 없으니까……

선관위가 언론에 강하게 질타받는 게 뭐냐 하면 재외선거관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선거가 없는 때도 선관위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장기 상주하면서 그 비용이 전부 지급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 가는 게 아니요, 선거일 전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갔을 때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공관에만 다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그래도 언론에 그 부분 얘기가 좀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주 예전에, 2016년도에는 3년간 장기 재외선거관이 있었는데요. 그때 딱 한 번이었고 그 후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때 딱 1년씩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빨리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1대 대통령선거에 2.5개월 단기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단기 파견을 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작년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탄핵이 선고된 때

부터 실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견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2.5개월 같은 단기 파견에도 가족 동반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가족 동반을,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다 단신부임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선택 사항입니까, 본인이 가족 동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단신부임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 동반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던 겁니다.

○이종욱 위원 제 질문은 2개월 같 경우에 가족 동반을 안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사정에 따라서는 데리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 이번엔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 쉼위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 동반 없이 단신부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도개선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또 부처 의견은 주의 받겠다고 해 놓고 또……

그러면 그거를 합시다. 부처가 주의를 수용했으니까 주의로 의결하되 적어도 제가 봐서는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준비는 재외공관이 다 해요. 혼자 가서 사실은 선관위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 직전에 나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의 기간도 사실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 들어요. 들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시비를 안 걸겠지만……

이게 단기파견인데 가족 동반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걸 기회로 해서 가족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거기다 본인만 들어오고 애들은 외국학교에 또 국제학교나 이런 데 보내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활용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1년씩 파견 나간 직원 중에 실제로 가족 동반하고 나가서 이후에 애들을 거기다, 학교에 놔두고 혼자 귀국한 사례가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례는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 사례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된다면 단기파견인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의 가족의 교육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파견은 개인 혼자서 가는 게 맞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저희들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18명을 파견을 보냈고 그 직전 국회의원선거 때 22명을 파견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미혼도 있습니다. 미혼 직원도 가는데 보통 40대 전후의 대상자들이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 40대부터 50대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초등학교생이라든지 중학생 이 정도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견 대상자가 선정이 되다 보면 그 아이들만 국내에 남겨 두고 당사자만 가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그걸 제가 지금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그 직원이 가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결국 자기들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는 용도로 쓰이면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화요일까지는 이걸 하니까 한번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가족과 같이 나가서 혼자 귀국하는 그런 사례를, 정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박순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같이 오신 분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홍인기 정책기획관 홍인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시작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총 5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4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빈집 등록·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독점적·사적인 사업 영역에 해당하며 타당성이 미흡

하고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2.7%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인중개사 활동비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의 이월 등 집행 관리를 엄격히 할 것.

여기에는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구 유형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결위 문구 대신에 상임위 문구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25년도 신규사업임을 감안해서, 농촌 빈집 문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두 번째 문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인중개사 활동비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이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공인중개사가 별도 중개보수를 받는데 빈집 등록·거래를 하는 이유로 국비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불요불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실제 등록·거래 실적에 있어서도 필요한 수준보다 15.9배가 많은 2억 14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자금 관리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농촌지역의 빈집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을 과연 폐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朴芝源 위원 중개사들이 시골에 있는 빈집 거래를 하면 별로 수수료를 많이 못 받으니까 빈집 거래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사실 빈집 거래는 오히려 시골에서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 공익적인 가치가 큰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렇게 단순 활동비 지급이 아니라 조금 더 내실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주는 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주의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폐지 의견을 낸 이유는 이 제도 시행이 사실상 탁상공론에 가까운 제도 시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적어도 공인중개사들이 이와 같은 활동, 빈집 거래를 할 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 봤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실집행률이 2.7%, 이것은 사실 집행이 안 된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 지역구가 대표적인 거예요. 4개 군에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집들이 다 폐가야. 그러면 누가 사겠냐고. 그 거래가 잘 되겠냐고. 조금만 현상을 파악해 보면 사실은 특별히 이런 제도가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도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답을 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잠시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5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매칭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서 일단 사업 착수가 늦었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하고만 주로 일을 하는데 강제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빈집 조사를 좀 더 강하게 하고 그 빈집 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한다면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026년도 예산도 편성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유상범** 얼마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거의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이월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26년도 예산은 6억 70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얼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억 4000만 원이요?

지금 9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 불용 나올 것 같은데요, 제법.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폐지까지 가는 것은, 2025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워낙 적어서 한 해 하고 폐지를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도 수긍하는 면이 있는데, 다만 그러면 이 문구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정리를 시키는 게 좋나요?

의견을 좀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朴芝源** 위원 지금 현재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위의 것은 그냥 받은 거고 아래 것만 정리하면 돼요.

○**朴芝源** 위원 사실 위의 동그라미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어서 두 번째 동그라미 ‘폐지’ 앞부분까지를 빼고 뒤에 ‘예산의 이월 등 집행 관리를 엄격히 할 것’까지를 위의 제도개선에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朴芝源** 위원 예, 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동그

라미의 ‘예산의 이월 등 집행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는 문구는 없어서 그것을 위의 동그라미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의 이월 등 집행 관리를 엄격히 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는데 말씀으로는 그렇게 개선한다고 하고 시정조치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저희도 좀 봐야 되니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방금 설명한 내용 플러스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실제 건수랑 이런 내용 그다음에 목표하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번 안건은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성과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지 않아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의 국가 소유 및 공공기관 무상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체계를 명확히 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과제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향후 연구성과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고 공공부문 활용도를 높이고 타 분야 개발 기술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개발한 기술 자체를 국가 소유로 하지 않으니까 민간기업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 연구성과는 소유권이 지금 농림기술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술평가원으로 돼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른 기관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가 소유로 해서…… 그러면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저희 사업시행지침에 소유를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유상범 미안하지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어촌공사가 소위 말해서 연구성과 소유를 갖는다고 해서 타 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공사에서 굳이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것 같은데, 국가 소유가 됐을 때와 농어촌공사가 됐을 때 그 차이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국가 소유인 경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이 기술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고요. 농어촌공사 같으면 R&D를 통해서 농기평에서 발주한 R&D를 농어촌공사가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한 기술을 농어촌공사나 농기평 소유로 하다 보니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공사에서 그 기술을 나중에 쓰게 할 때 국가가 무료로 지적재산권을 쓰는 것을 무료로 쓰지 못 하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당연히 다 동일하게 쓰일 거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관계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농어촌공사가 됐든 국가 소유가 됐든 간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이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이용의 어려움,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이종욱 위원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종욱 위원 국가나 관련된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했던 R&D 사업이라든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 소유가 되고 어느 기관의 소유가 된다는 건 다 정해져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과를 어디다 명시적으로 안 해 놨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도개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주의입니다, 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芝源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처음에 용역 과제를 공고할 때 농어촌공사 소유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붙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朴芝源 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신규 과제를 공고할 때,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때 공공부문도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국가나 이런 데 무상으로 활용하게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고에 명기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주의가 돼 있는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항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개선 하실지를 주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넣어서 이렇게 이 제도개선 하겠다라고 알려 주시면 주의 말고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앞으로 연구과제 공모 시 안내할 때 명확하게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니까 어떤 기준이나 표준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과기부나 이런 데서 다 정할 것이고 이걸 개별 기관에서 지침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성격이 더 크다고 보고요. 저는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사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어디에서 가지고 하는 기준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나라가 그것조차 없는 엉망진창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분야에 한해서만 제대로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앞으로 사안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는 설명도 또 그것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습고 이 정도는……

박지원 위원님,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직원들이 주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제도개선으로 갈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朴芝源 위원** 향후에 조건을 붙이겠다라는, 명시하겠다는 내용을 내부 지침이나 이런 데 별도로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연구과제 공모할 때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저희들이 R&D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다른 부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연구과제 공고할 때 그렇게 쓰라는, 명기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과제 공모할 때 그렇게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농어촌공사 등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면 저는 제도나 운영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질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사소한 것 가지고……

○**朴芝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정리를, 괜찮다면 이게 법령이나 제도에 미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농어촌공사 이쪽에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갈 부분 이어서 이걸 주의 정도로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라는 거로 갑시다.

박지원 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그것도 타당한데……

○**朴芝源 위원** 농식품부에서 주의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그렇게 갑시다. 내가 봐서는……

국가 소유를 명시한 R&D 과제관리 필요 부분은 우리 위원회는 주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으로 2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의 집행 특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예산·추경 편성 시에 집행 가능성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금액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

○**배준영 위원** 이 사업은 추경으로 증액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해야 될 정도로 연내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어려운 추경이었는데

집행가능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고 추경 224억 원도 26년 6월 기준 200억밖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예산과 추경을 연내 집행가능액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이것은 주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게 보통 하면 한 2년 내지 3년 사업에 농업인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냐면 지역별·축종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 예산을 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마다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집행하다가 추후에 집행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시 다른 도나 다른 축종으로 전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좀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관님, 위원장님이 그냥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도개선을 인정을 잘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출 보증금액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월이 불가능하게 이차보전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시면 위원장님이 충분히 제도개선 해 주실 만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1차 사업개선을 했고요. 예를 든다면 사업 선정 후에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자적 연장심사도 강화를 해서 집행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업자선정위원회도 도입하고 대출 거절 사례 최소화를 위해서 보증금액도 현재 상향하고 있고 이월이 불가능하도록 이차보전사업으로 사업 방식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朴芝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그런데 사후조치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사실 실행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또 과실 없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결산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일단 주의를 받고 경종을 받고 추후에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징계와 제도개선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주의와 제도개선 가지고 갈등했는데, 이게 야당에서 지적하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679억이 편성됐잖아요. 실집행률이 351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 추경을 할 때도 예산집행률이 이것 반도 안 됐을, 이것 근처에도 못 갔을 거라고. 그런데 국채를 그렇게 크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추경을 224억 넣고 사실은 완전 불용이 된 거 아니에요, 추경은? 그런데 이런 추경을 왜 했냐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추경예산,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에서 축사시설현대화와 관련된 추경예산 농림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반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팀장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이 사업은 그 당시에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의 농가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농가 긴급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그걸 왜 한 푼도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는 지자체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금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했구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집행을 고려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연초가 되면 지역별로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농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농가가 미리 사업을 포기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해 놓고 불용될 걸 예상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방금 설명은 일리가 좀 있었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산불특위를 했는데 산불 난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 좀 과도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해당 부처에서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얼마만큼 과도한지를 파악하기도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제도개선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걸 제도개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의견……

○배준영 위원 저도 일리가 있어서……

○소위원장 유상범 설득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실집행률 31.8% 이거는……

○배준영 위원 문제가 좀 있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변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는 같아요. 한 70%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서 일부가 안 돼 가지고 이렇습니다라는 변명이 되는데 실집행률 31.8%는 전망 자체를 완전히 잘못된 거고 예산을 뺏기겠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이것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어요, 8월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26년도 예산은 현재 기준으로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보서는 7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위원님들, 이게 내가 보서는 매년 불용률이 한 3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이미 데이터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할 때 이 예산 부분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반복적인 불용은 정부의 잘못이 더 크지요. 10년을 모아 보면 행위 유형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안 하는 비율이 다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정부가 예산을 깎이는 게 싫으니까 의도적으로, 특히 이 축사시설현대화는 명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됐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배준영 위원님이 설득을 당하셨고 박 위원님 오늘 보니까 굉장히 디펜스를 잘하고 있어서 이것은 부처 의견에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배 위원님?

○**배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의 예산 46억 8700만 원을 식량작물선도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방송·인플루언서 홍보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당초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별도 사업을 실시하거나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비 집행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산 밀·콩 소비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26년도에는 밀·콩 소비촉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게 설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전략작물직불사업이 2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소비 홍보·판촉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내역변경을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배준영 위원** 차관님, 그 방송·인플루언서 홍보에 따라서 얼마나 더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이 사업이 25년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전략 작물직불, 벼를 대신하는 콩·밀·가루쌀을 심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발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촉·홍보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략작물 관련된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지원하고 창고에 쌓아 놓고 이런 게 근원적인 문제지 무슨 방송·인플루언서 홍보에 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이런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한마디해 줘야지.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

○**김성희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김성희 위원** 아니, 주의로 받았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 주의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것 좀 들으면서 합시다.

(웃음소리)

○**배준영 위원** 이만 정리하시지요, 주의로 정리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방송이 어느 방송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TV, 유튜브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TV는 어디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전략작물팀장입니다.

○**이종욱 위원** 46억이나 썼는데, 일이억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TV 다양한 프로그램에 했는데, 전참시나 이런 것도 했는데 가장 크게 들어갔던 것은……

○**이종욱 위원** 편당 1억이잖아요, 편당 1억.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편당 1억이 들어간 것은 유튜브에 한 2개 정도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영자, 최화정 이런 채널이 1억이 넘고요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는 안 넘고 단가는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런 내역변경은 부처 자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산처, 부처 자체적으로 이렇게 46억 내역변경해서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가 알기로는 기준상 내역변경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은 예산처가 문제가 있네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46억을 내역변경 해도 예산처는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규정상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할 텐데……

○**이종욱 위원** 기준은 이런 경우는 협의 대상인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전용이라든지 내역변경 지침 관련 부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것 중요한 거잖아요, 결산에서.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역변경이나 이·전용 할 수 있는지, 예산처가 어느 정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예결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정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잠깐만 차관님,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내가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국산 밀·콩·가루쌀의 소비 확대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중국산이랑 경쟁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벼 면적이 적정가격을 받기에는 많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요. 한 70만t 많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벼 대신에 지금 가루쌀·밀·콩을 심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콩의 경우에는 국산 콩이 수입산 콩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엄 시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콩나물콩, 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산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지금 주로 저가용 두부 이런 것들은 수입산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들 목표는 가능하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계속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가 두 가지 측면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제품 개발해서 지역에서 판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방송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한 대목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제도의 시작은 결국은 과잉생산되는 쌀의 대체작물로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산업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겠다.

아까 내가 이것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것 했었으면 제도개선으로 끝났을 뻔했는데, 다 끝났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게 나왔나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차장 김상경** 농촌진흥청 차장 김상경입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이상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같이 오신 분들, 기왕 오셨는데……

○**농촌진흥청기획재정담당관 김은숙**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은숙입니다.

○**농촌진흥청결산팀장 김선옥** 농촌진흥청 결산팀장 김선옥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보고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그래도 왔는데. 그냥 나가시는 게 더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냥 보내 드리는 게 도와 드리는 거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라리 애로 사항을 말씀하세요, 오셨는데. 여기 민주당, 여당 핵심 위원이 다 계시는데.

○**농촌진흥청차장 김상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芝源 위원** 농촌진흥청이 저희 전북 지역에 있어서, 농업용 로봇 실증사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촌진흥청차장 김상경** 예, 맞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것 나중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국회 예산에서 잘 반영해 달라고 부탁 한 말씀하십시오.

○**농촌진흥청차장 김상경** 사실상 지금 디지털 체계와 AI를 통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어떻게 하면 농작업에 있어서 농업 로봇을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했던 농업용 로봇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로봇을 잘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로봇이 실용화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는 있어요?

○**농촌진흥청차장 김상경**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12개소 중에서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에는 안 들어가나요?

○**농촌진흥청차장 김상경** 잘 고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지원 위원은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3선 의원급으로 잘 쓰고 차장님도 답변을 잘하시네요.

의결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 같이 다 말씀하세요.

차장님 하세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산림청 차장 임하수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임영석** 산림청 기획조정관 임영석입니다.

○**산림청운영지원과장 이학만**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이학만입니다.

○**산림청운영지원과 전병철** 산림청 결산 담당 사무관 전병철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산림청에 대해서는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으로 대형 산불진화헬기 3대의 임차 예산 15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헬기의 실제 계약 및 사용 시기는 2026년 봄철 산불대응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6년에 사용할 헬기 예산을 전년도인 2025년 추경으로 앞 당겨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등 봄철 산불대응 임차 예산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만큼 본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원칙 및 시급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소요가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앞당겨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산림청에서는 시정

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작년 영남권의 대형 산불 이후 봄철 산불 위기가 고조되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품 수급에 따라서 산림청의 주력 헬기인 카모프 헬기가 불가동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임차헬기 확보가 시급하여 부득이 2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 봄철에 이 국외 임차헬기를 적기에 투입하여 신속한 산불 대응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지적사항은 결국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봄철 산불 대응으로 헬기를 도입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종전 사례에 보면 2026년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예전에 2025년에 중형 헬기 임차할 때도 보니까 두 달 만에 입찰 과정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26년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차장 임하수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기간……

다만 최근 국제시장에서 임차헬기 시장이 굉장히 계약관계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찰 공고를 언제 했어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입찰 공고는 2025년 7월 29일 날 했고요.

○이종욱 위원 바로 했어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계약은 총 107일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빨라도 한 3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일정은 맞추기는 했는데 어쨌든 빨리 하면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걸 추경으로 넣은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 이걸 예산을 반영 안 했으면 되는데, 국회 측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이종욱 위원 본예산과 추경은 구분해서 차이를 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도 제도개선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다음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및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도입사업은 관계 기관 협의, 장비 호환

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림청은 신규 특수장비 도입 등 예산편성 시 관계 기관 협의, 기술검토, 시장조사 실시 및 장비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저희 산림청에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2건 의견 중에 시정요구 유형인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2024년에는 관계 기관 불협의로 또 작년 25년에는 물탱크 제작사의 기술적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관계 기관과 문서로써 그 내용을, 진행사항을 정리하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의 불용·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보니까 그 위의 건은 주의를 했는데 그건 본인이 수용을 하셨네, 상임위에서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도개선으로 바뀌 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두 번째 안은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제도개선이고, 지금 상임위의 입장과 여기서의 입장이 왜 바뀌었어요?

○김성희 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산림청 차장 임하수입니다.

○김성희 위원 차장님은 그 문서 안 읽어 보고 오세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아닙니다. 다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뭘 다시 봐요. 뒤에서 지금 다시 가르쳐 주니까, 뭐가 주의고 뭐가 제도개선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줄이 많아요, 지금? 산림청 달랑 2개잖아요, 2개.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김성희 위원 2개를 보고 들어오는데 뭐가 주의고 뭐가 제도개선인지를 확인 안 하고 들어오세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희 위원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한 스무 개쯤 되면 내가 헛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 그것 보고 오늘 아침에 받으셨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제도개선이에요, 지금?

○산림청차장 임하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제도개선입니다, 백선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그러면 위엿것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다른 것은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속기록 지금 확인해 볼까요? 처음 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방금?

○산림청차장 임하수 아니, 앞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정부가 국회 결산을 들어오는데 차장님이 문서 내용을 딱 두 장인데도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제도개선인지 주의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까? 너무 게으른 것 아니에요? 썩 다 뒤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할까요? 웬만큼 해야지 진짜, 웬만큼.

○산림청차장 임하수 죄송합니다.

○김성희 위원 죄송합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한말씀…… 화내는 여당 위원님이 더 무서워요, 야당보다는.

그런데 상임위에서 주의를 받았고 지금 설명하신 관계 기관 협의가 안 됐고 내부 패널 장작이 불가함을 통보받고, 이런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점에서 저는 주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년 연속 예산 불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얘기할 사안은 못 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으니까 주의가 좋고.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라고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朴芝源 위원 사실 내용상으로는 첫 번째 게 오히려 제도개선에 부합하고 두 번째 게 주의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차장님 여기 와서 한번 혼쭐이 났는데 그렇게 바꾸자고 그러면 차장님께서 ‘나 바꾸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김성희 위원님이 또 한마디할 것 같은데……

○김성희 위원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렇게 정리합시다.

정부 입장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시정요구 유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주의,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 예결위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장님, 말씀대로 안이 많지가 않아요. 달랑 2개예요. 아마 약간 긴장을 하셔서 가지고 와서 그냥 포괄해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상임위 결정과 다른 말씀을 하

시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점잖은 김성희 위원님께서 그래도 2개밖에 안 되는데 이 건 너무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향후에 국회에 오실 때 뭐 불필요하게 얘기 들을 것 없잖아요. 1시간 전에만 일찍 나오서 가지고 한번 훑어봤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신경 쓰세요.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 지역구가 산림청 관할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애쓴 것을 좀 산림청에서 알아 주세요.

(웃음소리)

차장님이 답변을 줘야지 나도 끝내지.

○산림청차장 임하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산림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재철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임창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임창현입니다.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장 허남기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 허남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해양수산부는 주로 남성 위주로 편성이 되는 모양이구나. 여성 과장이 아무도 없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총 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연변 2번,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2025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5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억 4000만 원, 14%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야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자를 엄중 경고 조치하고 향후 예산·추경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

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우리 기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같은 건으로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위원장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 상임위에서는 주의 처분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을 저희가 2025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지방비 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의를 우리 기관에서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마른김 수출 자체가 2025년에 처음으로 11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금년에도 7월까지 7억 불 달성해서 금년에 약 12억 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까지는 18억 불 정도로 계속 수출 진흥과 관련해서 마른김 장비 자체에 대한 교체 수요, 확대 수요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같은 건에 대해서 이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주의 처분을 내리신 바 있고 제도개선은 저희 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그러면 제도개선을 요청하면 거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국채발행을 야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자를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라는 문구를 그냥 유지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서 하셨던 주의 부분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비 미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라든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내용을 보니까 추경 편성 과정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양부가 생각을 한 게 김의 주 생산 시기인 10월부터 5월까지의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이종욱 위원 공장 가동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해양부 판단이 맞았지요? 해양부 판단이 맞았는데 그런 해양부의견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고집을 해 가지고 결국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 시정요구사항도 전남시 관련자를 엄중 경고하라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는 제도개선 가지고 경고가 되겠습니까? 징계나 주의를 받아야지, 너 때문에 징계·주의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더 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도개선 보다는 주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朴芝源 위원 지금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지방비 매칭이 안 된 것은 여기서 엄중 경고 조치한다는 관련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자체가 도 차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매칭이 됐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된 담당자들에 대해서 경고 조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도 취할 계획입니다.

○朴芝源 위원 기초단체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특별시 차원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됐는데 그 밑의 기초단체에서 확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를 통해서 해당 기초단체의 관련자에게 경고가 된다고 하니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통합특별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까지 하는 주의를 조금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처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욱 위원 국민들을 위해서, 차관님 처음에 해양부가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 10월에서 5월 사이에 바쁘다, 공장을 멈출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컸던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당시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물김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인 73만t이었습니다. 전해 연도의 물김 생산량이 58만t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김 생산을 위한 장비가 풀로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약 6000t 정도가 폐기되는 등 물김 자체에 대한 공급, 마른김 생산 케파가 받쳐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감안했습니다만 7월 달에 정부안 추경을 편성하고 지자체에서 빨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폐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장비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추경을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물김 건조기 생산과 관련해서 주생산 시기가 10월에서 5월이면 그 사이에 생산하던 사람들이 건조기를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자체에서 약속을 했다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무원이 자기들은 준비 다 됐고 예산 확보돼 있으니까 해수부에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러면 ‘너 책임져’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산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 국채를 그렇게 크게 발행하는 추경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니까, 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권자고 결정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걸 얘기했을 때 그냥 거부를 해야지 그

걸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 아니야.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거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거기서 조른다고 그냥 들어준 것 아니야. 이걸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야가 국채 발행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주장 내용이 팽팽합니다만 그래도 추경을 하는 데는 적어도 그 예산이 바로 쓰인다는, 적어도 당해 연도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밑에서 조른다고 그걸 그냥 눈감고 들어 줘 놓고서는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실 저희는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밑에서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게 되는 모양새는 여러분한테도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기관이면 책임 있게 일을 하세요.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서는 나중에 돼서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이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큰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당연히 막았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것은 앞엿것 이미 주의가 왔으니……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요? 이미 두 가지 안 중에서 위의 안 이 부분이 주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추경예산 편성은 향후에 이런 식의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많이 깎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배준영 위원 하신 다음에 저도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먼저 하세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 뵈 김에 제가 안 여쭙볼 수가 없는데, 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 개혁 통폐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울산 그리고 여수광양이 4개를 다 합치기로 했는데요. 사실 20년 전에 해양수산부가 설득을 할 때는 각 지역의 항만 기능을 개발하고 포트세일즈를 해서 각자도생해서 경쟁력 있는 항만을 만들려고 설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내는, 말하자면 그런 기여를 하는 공공기관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만공사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지방해양수산청만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황종우 장관님한테 그러면 과연 합치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차관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4개 기관 합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양 그리고 항만물류 환경 자체가 AX, GX 그리고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서 항만공사 단독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A 같은 경우도 배

후단지에 대한 공공개발이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각 항만별로 차별성은 충분히 살리면서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대신에 각 항만별로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항만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개혁방안을 만들 텐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TF를 만들 때 지방정부라든지 각 PA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차관님의 취지대로 하려면 다시 해양수산부랑 합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4개 기관을 만든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하겠는데, 각 부처에서 기능 개혁 추진 세부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다가 합치는 게 안 맞다고 판단을 하면 이 통합방안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현재는 저희가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추가 발언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임명길입니다.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지국현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지국현입니다.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이원재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이원재입니다.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차장이 안 계시나?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차장이 부산의 사고 관계로 현장 지휘하고 계십니다.

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 참, 사고 때문에 거기 간다고…… 맞다, 어제 보고받았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항공기 도입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항공기 도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장점검 원칙과 달리 서면 등으로 대체하면서 예산 2억 11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공정 과정별 현장점검 수요 재점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항공기 도입 일정과 실제 사업공정을 면밀히 반영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시정으로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공정 일정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공정 일정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시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특별히 없으신가요?

○이종욱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답변한 것 맞지요, 항공기 도입? 그렇지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국외여비를 많이 하고 다른 데 이·전용하고 또 불용하고 그래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항공기가 도입되는 과정이 한 4년~5년 차 사업으로 되는데 1년 차에는 통상 설계 단계라서 해외에 가는 현장 일정이 많이 없는데 저희들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 이번에 잘못 편성되어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차, 4년 차는 해외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일정이 많은데 보고서를 조금 누락해서 공정 관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여비 올려 놓고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바로잡아 주시고, 시정받으신다니까 시정을 해서 잘 시정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시정이 아니고 혹시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데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시정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朴芝源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으로 정리했어요.

○**배준영 위원** 시정으로 했다잖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사실 이것은 시정을 받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도 무방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게 항공기 현장점검을 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면, 한 6년 차 도입을 하면 실제로 항공기가 제작되는 그 시점에 현장점검이 들어가고 그 앞에 설계하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고의적으로 여비로 쓰고 이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이것은 고의적인 예산의 전용을 의도하고 한 거지 마치 그냥 만연히 했다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 공무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항공기 도입 건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현장점검 이런 예산을 계속 붙여 버리면 결국 나갈 일이 없는데 계속 이·전용하는 거지. 이것은 고착화된 비리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하여튼 사업추진 방식 꼭 변경하세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교육원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관리용역비 1억 500만 원을 당초 56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던 교육훈련시설 노후도 개선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교육원 관리용역비의 예상 불용액을 시설유지보수비로 조정할 경우 불용액 확정시기와 시설보수의 시급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건드립니다. 그 이유는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해 연말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의견 주신 대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해경청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게. 연말에 남는 돈을 조금 다른 데, 시급한 데 쓰고 싶지요. 그렇지요? 쓰고 싶은 건 있는데 예산원칙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유형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세요.

○정태호 위원 상임위 의견이 제도개선이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제도개선.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이 부분은 주의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좀…… 행정부처에서 일부 불용예산 나오는 걸, 항상 시설유지하는 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에서 돈을 충분히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요? 돈을 충분히 안 주지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많이 부족해요?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임명길 예.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 국장님 나왔는데……

많이 부족하다는데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기존 사례를 봐서 많이 부족한 것은 유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기관 운영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권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입니다.

○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 오승철 기획조정실장 오승철입니다.

○산업통상부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입니다.

○산업통상부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 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산업통상부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안 이루어졌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여기가 사실상 예비 및 본심사네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산업통상부에 대해서는 총 2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대상은 1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 252억 1300만 원에 제1회 추경으로 117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190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지별로는 포항이 전액 불용되었고, 새만금은 89억 2400만 원 중 70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시 인허가 취득 현황, 실시 설계 완료 여부, 기업의 투자 확정 여부 등 착공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증액을 지양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따른 다년도 예산지원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불용이 된 2개의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시정, 주의에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년도 예산지원 방안 구체화 부분 쪽에서 구체화를 검토로 용어를 좀 바꿔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기반시설구축지원이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의 30~5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쪽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의 산업단지에 속한 지자체나 이걸 받고자 하는 기업이 시작을 할 때 한꺼번에 받기를 희망하고, 그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 쪽이 단년도 사업이 될 때 예타 사업의 예외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이 되면 예타 사업을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나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결산에서도 2개 사업이 불용이 된 것처럼 불용이 날 가능성이, 위험성이 여전히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쪽을 사전에 완전히 다 모니터링해서 걷어 내는 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부의 의견은 이러한 첨단특화단지 산업이 지자체와 기업들이 스피드를 내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7년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건의드리는데 단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유지를 해 주시되 저희 산업부가 최선을 다해서 불용 사업들이, 그러니까 단년도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걸러 내는 것을 산업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건의는 단년도 사업으로 유지를 좀 시켜 주시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건의 드리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설명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차관님 설명을 들으니깐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산자부 생각은 30~50% 지원인데 그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한꺼번에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이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저희도 그렇지만 기업이나 지자체가 절대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종욱 위원 지자체나 기업은 당연히 그걸 원하겠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자기 돈하고 같이 비례로 가야지 이게 국가 돈인데, 국민 돈인데 한꺼번에 먼저 태우고 나중에, 자부담은 뒤에 천천히 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정부 입장이라고 차관이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같이 지고 오히려 더 큰 책임은 지자체나 추진한 기업이 지고 나머지 국가는 따라가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부터 먼저 박으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요, 잘라서? 그렇게 제도를 형해화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실무자도 아니고 정무직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기업체의 책임 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실무자들 이렇게 제도를 이리저리 회피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정부 입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처는 이렇게 예타를 회피해 나가도, 편법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잘라서 단년도 사업으로 해도 됩니까?

한번 예산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그 사업 목적이 예타를 회피하기 위한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종욱 위원 아까 차관님이 예타 예외로, 단년도 사업은 예타 예외이기 때문에 단년

도의 일괄 지원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고 높은 시정 요구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유상범** 허 위원님.

○**허성무 위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부처의 입장이나 일반 사업들 같으면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 제목 자체가 국가첨단전략 산업특화단지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2022년도에 만들고 2023년도부터 집행을 했는데요. 그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와 근본 취지가 차관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좀 설명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애초에 제도 자체를 만들 때 지금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트랙으로 할 때는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이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자체를 만들 때 일반산업 지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을 특별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앵커 기업들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애초의 목적으로 법과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요 이게 2023년, 2024년 전국에 12개가 지정되고 지원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아주 스피드하게 육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고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이다 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님,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특별한 것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국가예산 지원의 원칙이나 기준을 지키는 것은 또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기준이나 몸통이,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양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또 차관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이 많아지시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양쪽 입장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특화산업단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이오산업특화단지 또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을 했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결국 이 특화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초기에 신속한 자본 투자를 통해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제대로 구성하겠다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반시설 쪽은 특히 초기에……

○소위원장 유상범 초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100% 공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그 기반시설을 서포트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특화단지 지정됐으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을 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조율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당연히 기초지자체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하고 그 조건들을 놓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의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 같은 경우가 그게 이행이, 인허가가 안 됐던……

○소위원장 유상범 포항 때문에 발생한 일인가요, 이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데는 아니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개 사업이 불용이 됐는데 하나가 포항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또 하나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또 하나는 새만금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한 말씀만…… 사전에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초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기반시설은 초기에 빨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고 그 효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예타를 다년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타 작업을 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큰 말씀은 이거예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자고요. 이것 똑같아요, 논리가. 삼성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한다고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1, 2년 뒤에.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해 주기로 한 용수·전력 이런 것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할 수 없지요. 그 매물 비용은 나중에 누가 감당할 겁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거랑.

지자체의 전략 산업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도 그 수요나 공급이 계속 흔들리고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용수·전력·도로·필요한 주거시설 이런 것 다 미리 하

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의 지적도 100%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 교섭단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크고 또 부처에서도 위원들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 산업부차관, 지금 내가 국회의원 6년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역 민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 본 적이…… 민원이 아니라 지역 관련된 현안을 질문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회귀금속 중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텅스텐이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텅스텐 관련된 산업이 사실은 멈췄다가 우여곡절을 통해서 캐나다 회사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텅스텐 채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아마 산업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결국은 단순 채광만 가지고 그것 가져가서 쓰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발전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국내에서 제련해 가지고 회귀금속 우리가 편하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알몬티가 하고 있는 광산, 아마 주요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 주신 예전에 상동광산과 관련된 텅스텐 부분 쪽에 대해서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와 그쪽에 대해서 이미 지질조사나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다른 측면이 저희들 산업부로서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이 향후에 채굴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나 또는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당연히 그 부분 쪽에서 회소금속, 회토류와 관련되거나 회소금속 쪽에서 우리 쪽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텅스텐을 분말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게 주로 반도체 부분 쪽하고 또 연결돼 있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우리 회소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비축을 하는 문제 쪽하고 중국 외의 대체지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 트랙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국내의 상동광산 문제 쪽은 그러한 작업이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 정밀하게 추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가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정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가능하다면 9월 중에 한번 진행 사항 문 차관, 실무진 통해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왕에 위원장님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른 것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차관님, 그 광산과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많은 일을 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금 지불이 미루어지거나 안 돼서 불공정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신고는 혹시 받으신 게 있습니까, 물론 공정거래위는 아닙니다마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희 의원실로만 한 2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상으로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재산처 1건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합니다.

지식재산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한 분씩 하세요. 한 분씩 해야지 우리가 알아보지. 아니, 한 분씩 하시라고.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차장 정연우입니다.

○지식재산처기획조정관 박현희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 박현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두 분은? 같이 들어왔잖아요.

○지식재산처기획재정담당관 김갑병 지재처 기획재정과 김갑병 과장입니다.

○지식재산처지식재산거래과 염명환 지식재산처 염명환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지식재산처에 대해서는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지식재산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에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2026년에 추진할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전에 2026년에 추진할 사업을 2025년에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선집행하는 등 예산문란행위를 초래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계속사업의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국회 심의 전인 차년도 신규사업의 기반 구축·홍보에 집행한 사례를 재점검하고 향후 전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낙찰차액 전용 승인 시 사업 목적과의 직접 관련성 및 회계 연도 내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적하신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관련자 징계는 가혹한 측면이 있으니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회에서 기확정된,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거래 지원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입니다. 국민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이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편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은 재정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존 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담당자의 징계는 가혹한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3개나 있잖아요. 하나 징계는 개인적인 징계 요구고 그다음에……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나머지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시정요구는 수용을 못 하고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징계할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에서 담당자들 열심히 일 잘하려고 한 부분인데 수용이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결정하지는 않고 어떤 전체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3개 중에 그렇게 입장을 정하신 거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요지는 새로운 사업을, 그렇지요? 다음 연도 예산안에 국회에 제출해 놓

고 정부는 낙찰차액으로 먼저 시작해 버렸다는 지적이고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 또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개인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사실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징계를 한 거지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는 하여튼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징계 시정요구유형을 요구하고요.

또 재정 당국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 사용 승인 기준하고 이·전용 기준 있지요? 그렇지요? 그건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요약을 해서 다음에 한번 저희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시정요구를 징계를 요구합니다.

○**허성무 위원** 방금 부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이 원래 아이디어거래 지원사업으로 있던 것이 이름만 바뀐 거지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사업이 조금 소규모에서 규모가 더 커지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이 평판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응이 좋고?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대규모로 그리고 지자체 내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전 부처 사업으로 공모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서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 건데 또 예산상으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셨고 내부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예산 당국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부분은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미 제도개선 의견을 먼저 내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이게 6년간 73억 원 집행했는데 누적 거래액이 3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20년서부터 시행한 아이디어거래 지원사업이 총 73억 400만 원이 반영됐지만 플랫폼이 개통한 21년 3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누적액이 1053건에 3억 6000만 원이 거래됐다, 이게 맞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거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너무, 거래 실적하고 투입되는 예산 대

비 거래 건수가 너무 저조해서 사업 중에 사업체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거래 지원사업하고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입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업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세요.

○정태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기획예산처 입장은 뭐예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지금 방금 지식재산처에서 설명했듯이 당시에는 새로운, 차년도 사업을 새롭게 선집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기존 사업에 일부 포함되는 사업으로 봐서 전용 협의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목적이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체계를 바꾼 건데……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기예처에서도 동의를 해 준 거고. 그러면 시정요구·제도개선 수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정태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일을 잘하려고 해서 더 잘된 거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정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관련자들 징계는 좀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주의나 제도개선 정도는 수용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주의나 제도개선이 다 시정유형의 하나인데 그걸 나는 왜 수용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잘하려고 한 건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실제로 잘했고.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리고 올해는 고속도로 유도선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식재산처 차장님, 입장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러고 실적이 저조하다, 배준영 위원님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잖아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꿨다, 종전에 하던 방식하고 개인이 자유로 상시적으로 올리는 거하고 이제는 대규모 집중 공모 방식의 공모전 형태로 바꿨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규모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기존의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공모전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원래 사업 추진방식은 이전 것도, 아이디어거래 지원사업도 공모전 방식이었고요. 추진방식, 미세하게 수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종욱 위원 미세한 건지 획기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자료가 조금씩 다르고 표현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행정부 자체적으로 동일한 스킴으로 방식이라든지 규모를 조금조금 늘리는 이런 형식의 낙찰차액 처리를 통한 전용은 아

니다, 사업방식이나 규모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안을 제출했잖아요. 제출해 놓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전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징계를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예산이 제출된 게, 작년 9월 3일 날 예산이 제출됐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보니까 전용을 한 일자는 8월 29일이네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공모사업이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전용부터 먼저 해 버린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하고?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러니까 사업을 차년도 예산안을 내기 전에 이 사업체계가 국민의힘 여러 위원님께서도 사업 수행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함을 알고 상당 부분 검토를 해서 차년도 예산 요구하고는 독립적으로 사업체계를 미세하게 조정을 했었던……

○소위원장 유상범 차장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기업이라고 해 보자고. 지금 이 플랫폼 개통을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총 지원한 게 예산이 73억 4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플랫폼을 개통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누적 1053건에 3.6억 원이 거래가 됐어요.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소위원장 유상범 통계상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기업이라고 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재정성과가 다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제가 민간기업 CEO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그러면……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다만 사업성과가 워낙 미진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 중간에 사업체계를 개편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케이.

올해 공모로 전환했다 그랬지요? 양식을 바꿨다고 그랬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공모는 다 같은 공모 방식인데……

○소위원장 유상범 현재까지 누적된 거래는 얼마입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올해는요 지금 공모 이렇게 방식을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2만 7000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 지정과제에 접수가 됐고 현재 톱 100 과제를 선정해서 밸류업을 지원,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중에 전체 60개 시장 과제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소위원장 유상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화되고 그것을 활용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여기에서 거래 지원사업의 거래 실적이라는 것은 공모된 아이디어

가 실제로 수요처가 있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거래된 건 얼마나 있나고?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금 거래된 거는 거래금액 기준으로요, 누적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6200이고, 지난해까지요. 금년에는 아직 결과가……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올해……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올해는 아직 결과가,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10월 중에……

○지식재산처기획조정관 박현희 10월 중에 선정이 되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성과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보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도화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의 실적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종전과는 다른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여러분이, 결론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허성무 위원 올해는 추진 과정 중에 있다는 거지요?

○지식재산처기획조정관 박현희 예,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잠깐만요. 또 획기적이라고 말씀하시네.

예산 규모는 그러면 금년도가 62억이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이종욱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11억 정도에서……

○이종욱 위원 11억짜리가 62억으로 늘었잖아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민간 위탁, 어디다 위탁합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발명진흥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방식도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종전에도 그러면 같은 위탁이었어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종전에도 사업 자체는 발명진흥회에서……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관리용역비 목이 다르잖아요. 금년에는, 2025년에는 위탁사업비 목으로 바꿨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렇게만 봐도 10억짜리를 62억으로 6배 규모를 키웠잖아요. 아까 우리 유상범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시던데 민간기업이라면 이 사이에 안건을 올려놓고 먼저 집행해 버리면 그게 징계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결정도 안 났는데, 징계 사유잖아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었다, 내용은 유사하다, 어차피 할 거였다. 그러면 이사회가 왜 필요합니까? 국회가 왜 필요해요?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목적이 좋다고 해서, 좋은 목적 발전시켜야 된다는 당위성 좋습니

다. 그러나 목적 때문에 절차가 그것이, 잘못된 절차마저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직과 민간 사회의 차이 아니겠어요? 민간 사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아마 폐지를 했겠지요.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니까 폐지를 안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절차는 우리가 정해진 기본 국가재정 운용의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 위원님들이 서로 견해 차이가 많이 크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쪽지에 관련자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이 징계에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도 좀 추후에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태호 위원** 징계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

○**소위원장 유상범**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내용도 삭제를 해 달라?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본문에 들어 있는 시정요구사항도……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일 좀 더 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서 혹시 조정된다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참 불편한 얘기가 여러분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잘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변명거리로 삼아서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업을, 예산을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끌고 간 것이고 그러면 잘해야지, 그건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잘하려고 가는 것이 내가 면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곤란하지. 잘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남의 물건 훔쳐도 돼요? 집안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해도 돼요? 아니잖아. 국가공무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정태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런 표현들이 위원들한테 대단히 오해를 줍니다. 제가 아까 명확하게 얘기했듯이 저는 이거 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기예처하고 상의를 했지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기대를 하는 건데, 잘했다고 생각하면 잘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를 주는 거예요.

○**허성무 위원** 민간기업의 역할하고 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은 오로지 목표가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그게 반복적으로 실패될 때는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방향을 장려하고 또 그것을 격려·고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또 여의치 않을 때는 그 방법을 더 고도화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하고 또 다른 거지요.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더 거래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과거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고도화를 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호응이 굉장히 크고 많은 공모에 신청인들이 들어왔고 성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금전적으로 거래가 얼마 더 일어났느냐 이 부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선정이 되고 10월 돼야, 10월 이후에 이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 차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식재산처의 역할도 커지고 또 그런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적극행정이고 오히려 좋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 그 성과 부분도 명확하게 지표로 좀 나올 수 있고 빠르게 거둘 수 있도록 애도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이미 보류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들을 좀 같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제 생각 말고요. 아직,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니까……

○**배준영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소위원장 유상범** 예.

○**배준영 위원**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적극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좀 헛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는 결산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성과 적절성 이런거는 우리가 여태까지의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보고 그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평가를, 평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책임은 책임대로 또 미래는 미래대로 이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지 앞으로 잘한다는 게 과거에 대한 미스테인크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면 이 결산 자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크므로 보류하는 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논의가 많고 평가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고 2027년도 예산안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가 있을 것 같아요. 2027년도에는 여기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이 요구됐습니까, 신청한 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72억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계속 확대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2026년도의 실적 결과가 확인된다면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는 걸로 해서 10월 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데 시간들이 다 필요해서 2시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차관 노용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기초실장 김우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장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장 남정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지요.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총 2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4건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39페이지, 1번부터네.

합시다.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1번,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제기되었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추진을 위해 최종 후보로 추천받은 3곳 중 임

대료가 가장 높은 홍대 더코너 건물을 전부 임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6년간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약 8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해당 고액 임차료를 원 사업인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사업에서 분리해 다른 사업인 창업성장패키지 사업 내에 편성함으로써 해당 임차료가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설명자료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및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의 입지선정 과정의 부적절성, 입지선정을 통한 특혜 제공 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국가재정법 위반사항 및 이에 대한 중소기업부, 기획재정부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밝혀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고 손실 추정액을 변상할 것.

다음, 감사요구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소위 자료 10권에 공통 요구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 10권 1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별지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안의 요구사항은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고, 감사대상 기관은 중소기업부와 기획예산처입니다.

감사요구 사유는 중소기업부는 글로벌 창업허브 관련 임차료를 상이한 목적으로 편성된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및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명확한 설명 없이 분리 편성하였는바 창업허브 입지선정 과정의 부적절성 및 특혜 제공 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국가재정법 위반사항 및 이에 대한 중소기업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함.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변상에서 부대의견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시정요구사항 유형인 변상은 감사원 감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방금 말씀은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요구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변상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감사원 의견을 먼저 들을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연초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 10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창업기업 재정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이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그 감사계획에는 이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창업 지원과 관련된 재정 운영을 감사하는데, 이거가 포함은 안 됐었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원래 포함돼 있었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이거 변상인지 아닌지 시정 여부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이제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어차피 감사원에서 한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건 민주당 위원, 권향엽 위원이 강하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다른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허성무 위원 이 건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던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요구가 상임위 내에서도 권향엽 위원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를 하였고 다만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때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강행된 거 아닙니까? 작년 국정감사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돼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중기부에서 계속 강행을 했고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지적한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처음 말씀을 주셨고요.

○허성무 위원 처음 말씀을 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안 편성·심의하실 때 한번 다시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한 번 다시 이야기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추진이 됐고 그때 작년 감사 때 굉장히 격렬하게 권향엽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도 같이 감사를 했었지만……

○허성무 위원 그 자리에 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단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걸 규명하라는 요청이 있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인 게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감사 건이니까, 감사를 하시겠다 하니까 감사를 가는 게 맞고.

이 조치 부분에 있어서 변상은 결국은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이것만 딱 집어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거 하면서 같이 보겠다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지요, 그런 이야기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러긴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감사요구가 들어오면……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별건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요구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간사님께서 협의가 잘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개 문제고.

여기서 이슈로 지적하는 게 예산을 분리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분리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측면에서의 감사원 감사는 특혜라든지 조직적 가담 이런 거는 하는데 감사요구안으로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분리 편성해 가지고 내역 파악이 안 되도록 이것도 설명 자료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분리 편성한 거예요? 차관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에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이후에 관리·운영·진흥 사업은 목적이나 예산 성격이 다르다고 기획예산처, 당시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례들을 참조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욱 위원 애매한 거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 제기하시는 권향엽 위원님은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의 핵심사업인데 이쪽이 임대료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다른 사업 내내역 사업으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런데 기존에 연수원 구축 사업하고 운영 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한 사례들도 있고 또 타 부처 사례 등 참조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하에 예산안을 짰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참조하더라도 그게 아주 좋은 우수 사례는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오히려 안 좋은 사례지요. 오히려 따로 편성을 하더라도 설명을 잘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이쪽 부분은 위원장님, 최소한 제도개선이나 뭐 주의나 이런 쪽으로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예산처 얘기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랑 협의해서 다 서로 상의된 거라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도개선 대상이 되느냐라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의돼 가지고 분리해서 처리된 것은 기획예산처가 다 동의해서 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시정 유형으로 지적하는 것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기획예산처입니다.

인프라 사업하고 사업 운영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야 되느냐, 하나로 합쳐야 되느냐라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쪽 운영비 부분들이 별도로 계속 규모가 커지고 또 향후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장기계획하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게 사업 운영에, 재원 관리에 효율적일 것 같다는 협의하에 이렇게 갖고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운영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문제 제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때 당시 입지를 여러 개를 보다가 마지막 3개가 올라왔지요. 그런데 선정된 입지하고 나머지 2개의 후보 사이에 연 임대료 차이가 약 40억 정도 크게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데가 선택이 됐지요. 선택이 됐는데 그 선택이 된 건축주를 알고 보니까 특정 자산운용이 있었고 이 자산운용사의 핵심 임원이 이명박 정부 때 오영주 장관의 남편과 함께 초기에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멤버였고 그리고 이것이 중기부에 임대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이 자산운용이 당시 새마을금고로부터 1320억 원을 바로 그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비싼 데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비싼 임대료 부분을, 운영 부분들이 분리돼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제대로 감사도 받아야 되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한다고…… 임대료 계산만 해도 1년에 40억씩 추가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해의 다년 사업으로 매년 나가면 이게 축적된 추정 금액이 약 37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 권한업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임대료 예산을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도 결정하자는 이종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종욱 위원 나중에 간사님들이 감사요구 하실 때 같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게 입지 선정은 24년 말에 있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일단은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니까 내부 시정 유형은 보류해 놓고 가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내부 시정 유형은 보류하면 또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변상을…… 감사원 감사요구가 있는데 감사 후에 결정할 사안이니까 시정 유형 변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만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다만……

○**정태호 위원**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정리하자는 거지요, 이종욱 위원님 말씀만.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보류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냥 보류시켜 놓고 한번 더 얘기를 하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러시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4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선도형 제조혁신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낮은 AI의 활용률을 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보조금 지원만을 중심으로 예산액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공정별 AI 적용례, 구축비용, 성과 및 실패 요인 등을 비식별화하여 축적·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구축 기업 수 또는 매출·고용 증가가 아닌 투자 대비 효과 및 미지원 기업·산업에 대한 확산 효과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방식 대신 보조율 차등화, 용자와의 혼합 및 성과연계 지원 등 기업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같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개별 기업 지원에서 업종·지역·공정별 그룹 단위 지원 방식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부담 상향하는 등 성과 공유와 확산 및 재정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미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미 제도개선 추진했는데 무슨 제도개선을 또 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보고를 하라고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무슨 AI가 매직 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AI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부에서 모든 분야에 뛰어들고 수조 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식으로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여기 재정 당국도 있지만—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총사업비 50%를 지원해야만 AI 도입이 된다는 것은 뭔가 도와주려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율 차등화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원 방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총사업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좀 줄인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현재는 정부·대기업·도입기업 해서 50%·20%·30%로 돼 있는 것을 정부를 40%로 낮추고 도입기업을 40%로 올리도록 그렇게 기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상생형이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지원이 같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정부 50, 대기업 20, 해당 기업이 30인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해당 기업이 30인데 40·20·40으로, 대기업 비율은 그대로 20으로 유지하되 정부를 10 낮추고 도입기업 부담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정리했다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허 위원님.

○허성무 위원 AI 당연히 보급해야 되고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에 AI 융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우리 최고의 생존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중대 사업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꼭 지적해 주신 것은 참 좋고 시정도 잘하시겠다는데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상임위나 이쪽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수 사례는 정말 우리가 공유를 많이 하고 전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고 우수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허성무 위원 사실은 실패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도 않고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보급 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총체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급 기업들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법안도 냈는데 지난 국회에서, 제가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려서 죄송합니다만 국회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한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지금 돈을 누가 조금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실패가 최소화되게 잘 보급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성무 위원 그리고 이미 개선을 다 하고 계시니까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저도 제도개선.

○소위원장 유상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 추경에 처음 들어온 사업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기존부터 있던 사업입니다만 선도형 제조혁신 쪽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형으로 해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으로 정부가 같이 추진하는 형태이고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이 분야 융합스마트공장 보급이 추경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올해 본예산에 900억으로 증액이 된 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게 900억 맞아요? 얼마지요, 여기 자료에는 900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900억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원 대상이 100개에서 400개로 확대가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대가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늘 얘기하는 사업을 채택하고 확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자하고 집행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그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시정요구사항 지적에 들어가 있어요. 또 요구 내용도 보면 결국은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 투자만 집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근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보고가 가능한 겁니까, 27년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가 구축 후의 효과를 몇 년 단위로 보실지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가 당해 연도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지만 차년도라든지 이렇게 특정 기간에 대한 비교 효과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도입률이 1%입니다.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이런 시급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작년 추경을 언제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작년 추경이 1차, 2차 두 번 있었던 걸로……

○소위원장 유상범 이거 2차 추경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2차 추경으로 기억……

○소위원장 유상범 그때가 기간이 언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차 추경이 7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7월이었나요? 그런데 여기에 된 것 보면 사업 선정하는 과정을 겪어 가지고 협약 완료는 작년 11월에 됐네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협약 완료가 11월에 됐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 집행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됐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소위원장 유상범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7월에 해 가지고 협약 맺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2026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해 놓고 수많은 국채를, 빚을 내서 해 놓고서는 결국은 실제 예산은 2026년도에 쓰는 예산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올해는 또 그것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확대하고 900억을 넣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본예산으로 넣어도 아무 문제없는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사실상 불용을 250억을 끌고 간 거라는 이 비판도 결코 잘못된 비판이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무슨 말씀……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AI를 융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선정하고 평가하는 그 과정만 해도 몇 개월이 필요한데 그것이 1년 단위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사업을 갑자기 추경에다 예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진행을 하려니까 당해 연도에 이 예산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올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 추경과 올해 확보된 예산, 그래서 아마 이게 900억 정도가 되는 모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추경이라는 게 세원이 남아서, 우리가 초과세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국 당해 연도에 집행도 못할 것을 사업을 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쥐어짜듯이 만들어 내 가지고 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적이 있는 거고.

정부에서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각 부처에서, 어차피 이것 보면 부처에서는 추경했을 때 당해 연도에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것 충분히 예상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많은 사업들이 드러나니 이것은 야당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는데, 장기간 걸릴 사업을 가지고 하반기 추경을 해서 그 사업을 집어넣고, 어차피 본예산으로 다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2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은 먼저……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거라니까요.

○허성무 위원 지출이 쭉 나왔던 것 아닙니까? 집행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본예산이 있고 지금 추경이……

○허성무 위원 본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던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본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됐고요.

○허성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해야 될 요구가 생겨서 1차·2차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허성무 위원 대상이 달라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AI 공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게 추경으로 들어갔고요. 본예산은 스마트공장……

○허성무 위원 스마트공장이잖아.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의 문제보다는……

○허성무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보면…… 현장에 많이 가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현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성무 위원 제가 수십 군대를 가 봤거든요, 이걸 시행한 업체들. 그러니까 스마트공장 구축과 AI를 더 융합시키는 거에, 물론 단계 차이는 있지요. 있는데, 각 공장의 특성에 따라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면서 바로 AI를 같이 구축한 데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바로 이 상생형에서 있고, 그런데 그 단계에 못 미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다시 AI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고도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보급사업 중에서 수요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제일 선호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제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허성무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대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서 이 형으로 보급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지금 제도개선을 하시면서 자부담을 오히려 10% 높이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도입기업 부담……

○허성무 위원 도입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럴 때 조금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 부분은 시장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허성무 위원 이렇게 해도 집행에는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허 위원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려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돼야 될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를 결국은 추경에 편성해서, 결국 그해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2026년에 다 쓰는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지적 안 하면 앞으로 추경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다 태울 거예요? 정부 바뀌고 나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건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요.

아까 배준영 위원님 제도개선 말씀하셨고, 허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예, 제도개선 좋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부처 의견도 제도개선으로 돼 있으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43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네 차례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환급행사를 추진하였고, 10월 말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타 사업의 예산을 자체 변경하여 할인 지원을 연장해 연간 발행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크게 미달하였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정보 단절로 인해 특별판매·환급 행사의 지역별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성과평가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규모 및 특별판매·환급행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에 없던 행사 추진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타 사업 예산을 자체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사업자 변경 시 지원 실적, 회원정보, 가맹점 주소체계 등의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이관될 수 있도록 이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2025년 발생한 정보 단절 구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 중소기업부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올해에는 계획대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사가 또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정보 이관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의를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기초치를 다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의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난해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저희가 원래 계획에 없었던 환급행사 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오늘 무슨 회의에서 쿠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권 발행하고 특별판매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다 발행실적 대비 혜택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스로 기획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나 청와대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는 골목상권의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행축제라든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할 때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보고드린 예산안에는 없던 환급행사나 할인율 상향 조치 등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반영된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2개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시정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성무 위원 작년 경제 사정이 지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25년을 편성할 때도,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를 좀 늘리겠다고 당초 예산편성 때도 왔고 저희들이 그때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확대 편성을 했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런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소진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켰는데, 그 결과 25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소비가 살아나고 전체적인 잠재성장률도 조금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극행정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열심히 일해 놓고 또 비판을 세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도 있고, 사실 제가 좀 복잡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사실은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추석 때 이 할인행사할 때 지역구 다니다가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 줄을 오랫동안 섰거든요. 그때 당시 시정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행사할 때는 시정이 잘 되어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차후에 더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민해 볼 때 이후에는 좀 더 정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예상대로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타난 결과기는 한데 어쨌든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주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이렇게 10월에 조기 소진이 되는 경우는, 지방정부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말씀드렸다시피 25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3월 동행축제 그리고 설, 10월에 있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이런 행사 때 소비를 좀 강하게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할인율을 높여서 발행을 하고……

○소위원장 유상범 얼마에서 얼마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가 10% 하던 것을 15%로 할인율을 상향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 좀 더 빠르게 팔려 나가면서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다 보니 조기 소진이 됐고 그래서 작년 11월 정도에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돼서 부득이 350억을 전용해서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일 황당한 내용이 이겁데요. 운영사업자를 변경하는데 주소 관리 체계가 상이해서 기간별·지역별 데이터 추출을 통한 비교가 불가능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할……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개의 운영사가 이것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개 운영사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한 군데는 시군구 단위까지 데이터가 쪼개져 있는데 다른 한 곳은 시군구 단위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부득이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하나의 회사는 심각하게 문제 있는 회사를 선정한 거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앞에 있는 전용해서 한 것 이 부분은 아까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동적으로 한 측면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정부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설 대책, 추석 대책, 물가 대책, 무슨 페스티벌 할 때마다 각 부처한테서 다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발표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할인율 좀 더 해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제가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차관님 답변하는 과정에 2개 운영사가 시군구 구분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말은 그 전에 이런 데이터를 안 썼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 이것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는 안 돼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시정요구유형을 위는 주의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밑의 운영사 쪽은 시정으로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질충선까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지금 결정하기는 좀 그런가요?

제 판단에는 사실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운영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키는 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 가지고 시군구가 나누어지지 않는 운영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통합해서 2주가 중단됐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언제부터 시군구가 안 나누어지면서 이런 식의 혁신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가시고 앞에 말한 대로,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할인을 높히려는 건 정부에서도 워낙 경기가 나쁘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재경부를 통해서 요구를 했거나 했으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서 위엣것은 주의, 아랫것은 시정 이렇게 하는 절충선이 저도 지금은 타당해 보이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정태호 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이 좀 특징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은 시군구 구분이 원래 없잖아요. 전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국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권 때 그 인근의 다른 특정 상가 이런 쪽에 확대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시군구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상으로도 업체 자체가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다만 어느 지역에서 이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온누리상품권의 성격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 상품권의 성격 자체가 굳이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특정 업체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내용상으로 불법부당한 그런 행위로 봐 가지고 이것을 시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주의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 설명이 맞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시정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호 위원 해결까지 됐으니까 그냥 주의로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지역별 효과, 시계열 분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지금……

○이종욱 위원 언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원래 전국 단위 상품권이라 최초로 2개의 운영사가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자세한 어떤 행정구역까지 요구사항에 넣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통합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시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시군구별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것은 아마 그 운영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이종욱 위원 그럴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정태호 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은 전통 시장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가만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나오게 되잖아요. 지역상품권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상품권은 자치단체별로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상품권이 어떻게 발행되고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에서 다른 상점가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발전 과정에서 업체에서는 그 관리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상품권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업체의 자기 데이터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더더구나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 시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시정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유형인 것 같아요.

○허성무 위원 그 점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게 있고 실제로 이 할인율이 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부 공무원들을 타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정당마다 달랐고 온누리상품권을 주장했던 정당 쪽에서 24년도에 제대로 소비도 다 안 돼서 국회에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소비를 다 시켜야 되고 확장된 예산만큼 소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인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있었지요. 그 조치는 그런 정당의 뜻이 담겼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른 논리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중기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심사를 하는 위원이면서도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연말에 또 전용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시정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수동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는 게 저희 공통된 지적이고, 이것은 주의를 줘야 된다고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주의로 정리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니 이것은 보류해서 추후에 재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의 예산 전용 부분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53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창업패키지 사업은 평균값 중심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로 성과의 과대평가, 지원과 성과 간 불명확한 상관관계, 기업 단위 지원이력 관리 부재 등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패키지 사업의 성과평가체계를 정부지원 종료 이후의 자립성과 민간시장 검증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수혜대상 기업의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 성과분포 및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를 함께 작성·제시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나머지 2개에 대한 것은 정부는 다 동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지금 제도개선인데,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문구의 일부 변경을 희망합니다. 문구에 보시면 결산보고서에 함께 작성·제시하도록 요구하신 내용 중에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후속 투자유치 같은 자립성과 지표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기 때문에 사업 개선을 반영해서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사실상 결산보고서에는 포함시키기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이걸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니면 저희가 대안 문구 형태로 고민을 해 온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대안 문구를 나눠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건 지금 1안만 준비해 왔습니다만……

○소위원장 유상범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앙값 및 성과분포와 관련된 지표를 함께 작성·제시하고 자립성과 관련한 지표를 사업 개선에 반영할 것’으로 해 주시면 두 가지 다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성무 위원 중기부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도개선은 수용하는 거고 문제는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가 결산, 이게 중장기적 성과를 분석하는 거라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중장기적 성과라지만 그래도 3년이나 4년 이렇게 되면 또 보고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결산과 관계없이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성

과를 말씀하시면 보고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올해 결 내년 결산보고서에 낼 때는 저희가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돼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소위 창업패키지 사업, 청년창업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써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1인 창업부터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에 가서 지켜보니까 실제로 그 패키지 사업 해 가지고 열에 한 군데가 성공하면 다행인 경우로 보여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성과를 내는 것이 또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는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창업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소기업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지라도 적어도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를 3년에 한 번 정도는 보고해서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시기를 조금 달리하면…… 중앙값, 성과분포는 매년 보고하지만 적어도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하면 그것까지 넣어서 문구를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다만 보고는 드리는데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별도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보고토록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걸 문구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결산보고서에는 수혜대상 기업의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 성과분포를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는 매 3년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이 정도로 해 주셔도……

○소위원장 유상범 매년 사업 종료가 되잖아.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사업 종료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이종욱 위원 1년 내에 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이 자립성 지표가 사실 투자 유치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스케일 업이 더 됐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1년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종욱 위원 왜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정태호 위원 관례라 그래야 되나 전통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엑시트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투자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잘 아시겠지만 국내 IPO 소요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현실이 있어서 IPO로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태호 위원 그건 너무 길어지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는 안 되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VC 투자 유치 정도로 보시면……

○정태호 위원 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런데 그걸 사업 지원해 드리고 다음 연도에 바로 받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얘기가 꼬였는데 결산보고서에는 못 넣겠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결산보고서에 넣을 수 없는 내용이니깐 빼 달라 이걸 일단 일단락 짓고 매년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매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성과를 3년, 4년, 5년 뒤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평가 주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매 3년 보고를 받자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라 해당 개별 사업이 종료되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 우리가 뭐라도 평가할 게 생긴다는 얘기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당해 연도 지원 성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3·4·5년 전에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3년 전 투자……

○김성희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산보고와 상관없이 별도로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에—3년인지 5년인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니깐—3년 전, 5년 전에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보고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태호 위원 3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는 5년으로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소위원장 유상범 5년, 지금 이 제도가……

○김성희 위원 그런데 5년이라고 해도 이미 5년 전에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보고서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내일 당장은 안 되지만……

○김성희 위원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년 전에 투자했던 것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됐다라고 잘된 케이스를 들고 오시면 성과지표를 갖고 오든 갖고 오실 수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5년 전의 걸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걸 보여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매 3년이 아니라 그냥 준비하셔서 5년 전 결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5년이 더 잘 보여 주실 수 있다고 하면 5년 전에 투자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적절한 시점에 올해 예산 정국 안에 제출하시는 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하면 보고서에 못 넣을 이유도 없잖아요, 5년 전의 것 넣을 거면.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25년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가 결산과는 좀

무관하다고……

○소위원장 유상범 결산과 관계없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지는 한 데……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지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확한 시기는……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최소한 5년 전부터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5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5년 이전에 시행된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자립성 관련 지표를 국정감사 전에 보고할까? 어떨까? 보고사항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따로 보고받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국정감사 전에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서면 보고로……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요. 그걸 별도 항목으로 해서 자립성과 관련된 지표를 매년 보고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원 후 5년 지난 기간에 대한 자립성과 관련 지표를 국정감사 전에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소위원장 유상범 문구 정리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문구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가능해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어떻게 정리했어요?

○전문위원 주성훈 ‘지원 후 5년 경과 시행된 사업의 기업들의 자립성과 지표를 국정감사 전에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한다’.

○김성희 위원 ‘지원 후’가 아니라 ‘지원 종료 후’로 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지원 종료 후’로.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이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당부사항을 요구받은 게 있어서 잠깐 시간을 쓰겠습니다.

먼저 2025년 추경 3000억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AI 유니콘 육성을 이유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추경 3000억을 추가 출자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맞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결산 결과를 보면 사실은 그게 선정이 하나도 안 되고 해당 펀드의 2025년 실제 기업 투자는 0원이 됐었고 그래서 당시 모태펀드에는 상당한 출자대기재원과 회수재원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도 2020년 본예산이 아니라 2025년 추경으로 기존 재원이 아닌 신규 재정 3000억 원을 투입했었습니다. 이거 예결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벤처시장 활성화 필요 등 원론적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기존 재원과 그 당시에 회수 재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7000억 가까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규 재정으로, 추경으로 3000억의 재정을 집어넣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좀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곧 예정돼 있고요.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에 출자대기재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수 재원 그다음에 기존 펀드의 실제 투자 성과를 먼저 검증하고 그럼에도 신규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인데 가능하면 9월 중에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 들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지금 회수 재원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임위에서 또 의결을 해 주셔서 9월 중에 보고드리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안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지역도 가시는 시간이 있어서 5시 반까지 쉬지 않고 죽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쉬지 않고 그냥 죽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정통부1차관 구혁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제2차관 류제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 강상욱 기획조정실장 강상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대답을 할 때는 각자 대답하고 인사하지 그냥 인사부터 먼저 하면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강상욱이 어느 분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예, 접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앉아 버리니까 헛갈렸잖아, 지금. 왜냐하면 두 분이 답변을 하지만 입실한 분이 어떤 분이 왔는지는, 그냥 뒤에 이름도 없이 앉아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은 다 성함을 말씀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총 2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4건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은 2022~2025년 153억 3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집행액은 50억 700만 원에 불과하고 실집행 단계에서는 재이월·재재이월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사업 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출연금의 재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생명공학연구원이 여러 가지 과기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 따르는 모양이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지는 않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라는 계약간 연구소에서는 많이 해 보지 않은 제도다 보니까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기본실시계획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한두 해면 괜찮아요. 한두 해 정도면 괜찮은데 보니까 만성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하는 게 과기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과기부에서 담당자나 이 사람들이 좀 더 관심만 가져도 발생하지 않을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진행되고 지적받을 일도 없는데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 주의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79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세 곳에만 구축되어 있어 해외 주요국이 다수 구축하는 것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기조에 맞춰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이후 대전 중부권 등 권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2차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그러니까 환자 치료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복지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을 ‘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 주시기보다는 ‘치료센터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할 것’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좀 애매하네요. 결산의 저희들의 시정요구 의견인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부대의견은 아니고 개인 의견으로 온 겁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예산·결산하고 관계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들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직접 관계는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저희가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문제는 특히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

는 데는 결국 우리나라 대형병원밖에는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치료센터를 둘 만한 병원 숫자를 계산하면 한 10개나 될까? 저는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0개까지 안 갑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건복지부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이게 한 기당 한 3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 같은 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과기부 소관보다는 보건복지부 관여도가 더 많은 부분이기도 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라고 돼 있지만 가속기인데요, 가속기에 대한 법과 연구개발 상용화는 저희 과기정통부가 해 왔는데 사실 이 가속기가 환자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여러 소재 개발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피폭받아서 치료하는 이것은 환자용으로만 쓸 수 있지 이것을 돌려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환자 치료 가속기인데 이 경우에는 제작이나 연구개발은 저희가 하더라도 복지부랑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중입자 가속기가 과학기술용 가속기가 있고 환자용이 있는데 이걸 다 환자용인데 사실은 국가가 이걸 가지고 나서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주도권을 갖는 부분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민원으로 넣었는데 시정요구유형에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넣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朴芝源 위원 저 뒤에 보니까 부대의견에 박용갑 위원님 부대의견이 달려 있거든요. 97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과기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중입자 치료시설의 권역별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달려 있어서 그냥 이것은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돼 있네. 그러면 삭제합시다.

삭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85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 AI 혁신펀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은 분담 형식으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부는 전체 약정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AI 혁신펀드 전액이 AI혁신기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주목적투자비율인 60%만 AI혁신기업에 투자가 강제되는 구조이므로 나머지 40%는 AI혁신기업과 무관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여 마중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의 분납 형식에 맞추어 정부의 일시납 제도를 개선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펀드 결성액의 40%를 AI혁신기업과 무관한 곳에 투자가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할 것, 여기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씩 나눠서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첫 번째 지적 시정요구사항하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모태펀드 관련된 부처들과 함께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펀드 결성액의 40%가 혁신기업과 무관한 비율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AI혁신기업에 투자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답변은 좋으신데 지금 정부의 일시납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분납 형식에 맞춰서 정부의 일시납제도를 일시납이 아닌 분납 형태로 운영을 변경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서 제도개선을 수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일시납제도를 분납제도로 변경하겠다 하는 제도개선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전체 모태펀드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일시납을 분납 형태로 바꾸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정부 출자분을 한국벤처투자에 납입을 하는, 예산 확정 직후에 바로 납입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펀드가 결성이 되는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자펀드 결성 시점으로 미루면 그만큼 정부에서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방안 등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분납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분납은 민간투자자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도개선 지적은 일시납을 분납으로 바꾸라고 지적을 했는데 ‘내가 제도개선 지적사항 받겠습니다’ 했다는 것은 분납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또 말씀은 분납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종욱 위원 일시납 시점을 바꾸자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일시납 시점을 예산 확정 시가 아니라 자펀드 결성 시로 좀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여기서 제도개선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시납을 분납으로 하겠다는 얘기냐고, 갑자기 제도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태호 위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제도개선이거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요. 제도개선으로 가는 건지……

○이종욱 위원 분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자펀드 결성도 안 된 상태에서 벤처투자에 선제적으로 일시납을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이자수익이 거꾸로 자펀드까지 가고……

이게 자금운용이 보통 하면 얼마나 넣습니까, 모태에 들어가는 게? 조 단위가 들어가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정부 모태펀드 전체적으로는 정부 출자금은 한 13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벤처투자에 들어가는 건 얼마 들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한국벤처투자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관리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허성무 위원 운용사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운용사인데 그러면 13조라는 자금을 돌리면서 기간이 이렇게 되면 그사이에 나오는 자금운용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이 특정 민간기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근본적으로 그런 지적이십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다면 일단 이 제도개선을 수용했는데 저도 그렇고 특히 박수영 위원, 배준영 위원도 그렇고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도개선을 하지만 사실은 일시납 시점을 자펀드 결성 시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도개선으로서 합당한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중기부가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관계

부처랑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중기부가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지금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제도개선으로 하셨는데요. 유형이 시정과 같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좀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AI라고 그래서, 저도 이미 윤석열 정부 때부터 AI의 국가적 투자 과제를 중요시하고 과기부가 주도해서 해 온 것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건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무투자비율을 60% 하고 40%를 AI가 아닌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 혁신펀드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그냥 전액을 다 혁신펀드에 써라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실제로 저희가 집행 단계에서는 지금 AI 혁신기업의 투자비율이 97%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모태펀드들의 유형들을 살펴봤을 때 보통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이 한 60%, 70% 그 수준에서 민간투자들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서 60%로 설정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집행 단계에서는 90% 이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펀드는 원래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더군다나 혁신기업이라 그러는 것은 정부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40%를 무관한 곳에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아무리 봐도 운영상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적정 비율을 지금 실제 투자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이렇게 40%를 다른 곳에 투자 가능하도록 한 구조를 설계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자펀드 결성할 때 민간 쪽이 같이 들어오도록 50대 50으로 주로 유치를 하는데요. 목적이 한정되면 민간 쪽에서 투자에 대한 스코프(scope),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주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부분의 모태펀드에 들어가는 출자펀드들이 평균적으로 50%에서 70% 사이로 주목적 투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 한 60%로 잡았던 것인데요……

○허성무 위원 그렇게 설계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 문제 아닙니까? 수익이 날 만한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 준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닫아 버리게 되면 펀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그 출자된 돈으로 수많은 자펀드를 만들고 그 자펀드에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여러 투자에 들어가게 하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걸 원래 목적으로만 딱 닫아 버리는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모태펀드에 돈을 출자해도 자펀드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닫혀서 볼 것이 아니라 원래 설계목적이 뭐였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어야 되겠지만 원래 취지도 같이 살려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민간의 분납 형식에 맞춰 정부의 일시납 제도를’, 충분히 이것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저도 봅니다마는 역시 이렇게 했을 때 민간투자를 자펀드로 끌어넣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시기 그것들, 6개월이든 7개월이든 자펀드 결성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납으로 자꾸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자펀드에 끌어넣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펀드 원목적에 위배될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AI 혁신기업과 무관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무관한 곳이라면 AI와 전혀 상관없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주로 지금 IT 쪽 영역들의 펀드들이 전문화된 펀드들이어서 보통은 AI만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AI랑 무관한 소프트웨어, IT 그런 범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쪽 IT 테크, 빅테크, 딥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와 전혀 무관한 쪽으로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성은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AI 혁신펀드만 놓고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태펀드라는 이 펀드의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펀드라는 게 말 그대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인데, 정부가 이 펀드의 50%를 대면 그걸 믿고 민간이 들어와서 100%의 펀드가 만들어져서 투자처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중물 성격이라는 거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줄 때 민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마중물 역할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40%를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때의 다른 쪽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AI면 AI 쪽과 관계돼 있는 영역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 들어올 때는 수익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는 AI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혹시 이쪽에서 수익이 안 날 것을 대비해서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여지를 남겨 주는,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민간이 모태펀드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설계된 거예요. 모태펀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AI 혁신펀드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AI에 투자를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모태펀드라는 원래의 정책 취지로 놓고 보면 이 설계가 그렇게 나쁜 설계는 아닌 거예요.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외에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지적 자체가 그렇게 썩 현실적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모태펀드를 직접 대규모로 늘려가지고 그때 유니콘 기업이 3개였던 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25개로 늘어났었어요. 그 기여한 게 모태펀드예요.

그래서 애초에 모태펀드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저는 이 설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런 논쟁은 있어요. 정부가 재정을 들여 가지고 펀드를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해서 민간의 벤처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쪽이 활성화돼서, 소위 말하는 민간 주도의 펀드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걸 제약하는 게 아니냐 이 논쟁은 있어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태펀드가 여태까지 성과를 가져왔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배준영 위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민간이 50%씩 투자하도록 하여 총 200억을 달성하고 주목적 투자를 50%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AI 혁신기업에는 100억 원만 투자돼서 당초 펀드 설립 목적은 전액 국고로만 이루어지고 민간자본 유치는 펀드매니저의 자율에 맡겨져서 현재의 민간자본 유치 펀드 조성은 무늬만 마중물이고 극단적으로 보면 정부 투자 100%인 펀드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는 민간 자펀드의 수익률과 직결돼 있어서 결국 정부를 믿고 들어온 민간 투자자금의 확대에 인해 운영 규모만 키워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잘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펀드 결성한 실적을 보면 1500억 중에 150억은 추가로 조성을 더, 펀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7개 펀드가 결성이 완료됐는데, 그러니까 1350억의 정부 출자금으로 지금 3945억 원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이상의 출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60%가, 전체 조성 금액의 60%가 AI 혁신기업에 투자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2배 이상 출자금으로 들어오는 민간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기여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한 40% 정도는 좀 유연하게 다른 분야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투자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한 470억 정도 되는 투자금이 AI 혁신기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97%는 지금 AI 기업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간단하게……

○소위원장 유상범 마무리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궁금해서요.

제가 주목적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 60%, 헛갈리는 게 AI 기업 A 기업에 투자할 때, 그렇지요? 그 내용이 AI 관련에 60%가 넘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렇지요? AI 기업 60%, 비AI 기업 40%, 그 뜻…… 어느 게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AI 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AI 기업이 60%……

○이종욱 위원 AI 기업을 했는데 그 안에 AI 투자가 60% 이상 돼야 된다는 뜻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그냥 AI 기업이 AI 사업 목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이종욱 위원 헛갈리는 게 AI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그게 순수 AI인지 아닌지도 섞여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런데 자금 조달 목적에 보면 주로 지금 AI 기업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 또 그런 칩을, 반도체……

○이종욱 위원 아니, 그렇지요. 거기에 AI가 들어간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AI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AI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AI인데, 그런 게 좀 헛갈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부 5 대 5 하는 것을 마중물로 하는 그 주장하고 실제 돈을 언제 넣느냐 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5 대 5로 한다고 했으면 하지 그러면 나중에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미리 돈을 박아 넣어 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민간에서야 거짓말이니까 네가 진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하지만 정부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납을 하더라도, 물론 분납을, 그렇지요? 정비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먼저 가는 건 좋지만 먼저 100% 박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본보기용으로 먼저 하는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100% 미리 박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부를 그 정도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지적의 시작은 사실 추경에 여러분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실제로는 2005년에 펀드 조성하고 하면서 2005년 예산안은 전혀 활용을 못 한 것이 가장 지적의 시작이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직접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펀드 자금을 기업들이 완전히 받지 못하면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벌써 민간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돈다는……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가 들려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당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거고 이 우려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돈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지 않았어요?

○허성무 위원 제도개선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뜻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태호 위원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소위원장 유상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종욱 위원 일시납 시점이 아니고……

○정태호 위원 일시납으로 하면 안 모여요, 돈이.

○소위원장 유상범 예?

○정태호 위원 아니, 일시납이 아니라 분납으로 하면 돈이 안 모인다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실제로 모태 펀드를 조성했던 정태호 간사님 말씀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부처의 요구사항도 제도개선이고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모으셨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설명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개선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예결위 위원님들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박수영 위원까지 해서 진행 계획을, 제도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다음에 문제 제기한 위원들 설득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86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86페이지?

○전문위원 주성훈 예, 86페이지입니다.

○정태호 위원 문구 내용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문구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첫 문구가 말이에요, ‘민간의 분납형식에 맞추어 일시납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나도 ‘분납형식에 맞추어 일시납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을 그러니까 ‘일시납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강구할 것’ 이 정도로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일시납 제도 개선에 대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할 것’ 이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시납 제도를 개선…… 다시 한번, 뭐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민간의 분납형식에 맞춘 정부의 일시납 제도 개선에 대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관계부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함께 검토할 것.

○소위원장 유상범 협의해 검토할 것.

아니,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정부가 일시납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받잖아요.

○정태호 위원 정부의 납부 제도……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일시납 제도 개선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86페이지, 연번 18번입니다.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억 원을 증액한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54.9%고 인공지능반도체고급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취업률 조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52.3%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산업계,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취업연계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부분도 시정요구유형을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취업 연계를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정요구에는 또 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취업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또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또 학생 인턴십 연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관님, 중요한 설명이 빠졌어요.

지적사항이 54.9%밖에 안 되고 고급인재양성 사업은 취업률 조사도 안 되고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은 취업률이 52.3%가 나왔어요. 이것 지금 개개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크지요, 지원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도 이것은 최고급 인력인데, 최고급 인력 지원인데 이것밖에 안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4.9% 이렇게 제시된 숫자들은 저희가 직전 연도, 그러니까 25년 8월 후기생들 그리고 또 올해 2월 달 전기 프로그램 졸업자 대상, 그 대상자를 가지고 7월에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업 직후에 한 숫자들이어서 일종의 학생들의 취업률이 졸업 직후와 또 1년 뒤에 조사하는 것들이 숫자가 좀 달라지고 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이전의 사업들 조사해 보면 23년도, 그러니까 24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을……

○소위원장 유상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꽤 됐나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세요. 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3년도를 조사하면, 그러니까 24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는 82.4%입니다, 같은 사업이. 그래서 1년 전 것을 조사하면 숫자가 확 늘어나고 지금 여기 지적해 주신 통계들은 바로 직전에 졸업한 학생들이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두 번째로 인공지능반도체고급인재양성 사업은 취업률 조사는 왜 안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사업은 23년 7월부터 저희가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이 돼서 올해 실질적인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배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조사 대상에서 아예,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졸업생이 나오고 졸업 직후 또 1년 뒤 그렇게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부분도 조사 시점상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것 동일한 내용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24년 2월경에는 여기 AI대학원이나 융복합 인재가 취업률이 82.2%였다고 하는 것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또 괜히 나중에 확인했더니 엉뚱한 답변이 나오면 곤란하게 되는데. 취업률이 그 당시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다 82.2%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하나만 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첫 번째 사업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추적조사를 AI대학원, 그러니까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을 때 23년도, 그러니까 24년 2월 졸업생은 82.2% 그런 식으로 24년도 학생들, 그러니까 25년 2월 졸업자들은 80.2%……

○소위원장 유상범 25년 2월은 80.2%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 그러니까 24년 8월 졸업자 또 25년 2월 졸업자들은 숫자가 확 떨어집니다, 54.9%. 그 숫자가 지금 여기 지적해 주신 숫자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7월에 조사했더니 떨어진 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올 연말에 가면 아마 예년에 비해서 80%는 넘어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융복합 인재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사 시점에 따라서 직후 하고 할 때 6개월 뒤, 1년 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관찰되는 추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에 오실 때요. 지적이 그렇게 됐으면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쉽게 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취업률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사업 주관 기관에서 계속 추적조사를 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추적조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전화를 직접 일일이 거는 건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프로그램 운영하는 AI대학원이면 그 대학원 학교 주임교수하고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화 취업률 조사를 계속합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여쭙본 게요 이 비슷한 게 산업부에도 있고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취업률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 업체한테 하기도 하지만 직접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급인력을 양성했는데 취업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추가하실 분 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실제와 지적 간의 시차와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충실한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소위원장 유상범 뭐가 있어? 뭐가……

○朴芝源 위원 정부는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이 2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몇 페이지부터?

○朴芝源 위원 일단 87페이지, 바로 그다음 87페이지인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87페이지?

○朴芝源 위원 예. 이것도 부처에서는 허준이 기념관이라고 부처에서는 수용을 할 예정 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 지역구 의원 관련해서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

○소위원장 유상범 글썽요, 없는 부분인데…… 문제 제기를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서 같이 논의해 주는 게 적절한가 모르겠네요.

○**朴芝源 위원** 그렇다고…… 2건을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87페이지 건 19번이랑 89페이지의 22번 건 그 2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금 보류를 요청해 와서, 아마 지역 현안이거나 그래서 아마 소소위 단계에서 좀 고려해 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정태호 위원** 보류해 달라?

○**朴芝源 위원** 예, 2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저희가 관련된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다 정리해서 의견을 반영한 건데 서면질의도 돼 있지 않고 갑자기 그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결산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용도 전혀 모르고 정부는 이미 수용을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여튼 서면질의라도 좀 넣어 주시면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태호 위원** 그래도 여기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발언으로 생각해 주셔야지요.

○**배준영 위원** 그건 원래 절차가 어떻게 되게 돼 있나요?

○**이종욱 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되지.

○**정태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다뤄 줘야지. 이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 다뤄 줘야지.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현장에 관련된 의견도 심사가 가능하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한 경우에 심사한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욱 위원** 그래도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논의는 해야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박 위원님. 87페이지, 89페이지.

○**朴芝源 위원** 그렇습니다.

87페이지의 연번 19번 허준이 기념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아마 지금 출연금 분할 교부나 이월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좀 필요해서 보류를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연번 22번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 사업인데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현황 파악이 좀 더 필요하고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걸 내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말씀을.

그러면 정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이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87페이지 고등과학원 허준이 기념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차례 이월됐습니다만 그 이월 사유는 공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양측이, 고등과학원과 카이스트의 어떤 논란이 서로 양자 합의가 돼서 금년 초에 합의가 마무리됐고 8월에 설계에 착수했고 내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주의를 받은 이유는 검토 없이 출연금을 매월 분할 교부한 거는 맞는 모양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럼 주의 받을 만하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래서 주의를 수용한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내부 공간 분배 비율과 같은 주요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채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의 조치를 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인지한 채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건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랑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민원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전달하신 것 같은데요.

○朴芝源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종욱 위원 과기부는 안규백 의원님실 통해서 뭐 들은 이야기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그러면 두 번째, 89페이지의 방사광가속기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오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이건 어느 의원님이지요, 말씀하신 게?

○朴芝源 위원 청주인데 글썄요, 의원님까지는 제가……

○소위원장 유상범 허성무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배준영 위원 허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왜 이걸……

○허성무 위원 저도 전달을 전혀 못 받아 가지고……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들어 보시지요. 정부 측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 역시도 거대 시설, 거대 과학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된, 계획된 것과 진행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변동되면서 총사업비 관리 기준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 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현재 상황은 금년 5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식을 시작했고요 지금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문제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감사합니다.

○**허성무 위원** 이게 제가 문제 제기를……

○**배준영 위원** 아니, 이준석 위원님……

○**소위원장 유상범** 이준석 위원이 있는데……

○**허성무 위원** 이준석 위원도 있는데 문제 제기를 했던 그거는 이게 그쪽 지역에, 정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온 도민이 다 나섰던 일이고 착공식 할 때도 정말 온 도민이 나서서 열렬히 축하하고 환영했던 사업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제대로 잘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2021년 0.5%, 24.5%, 이것 지나치게 지연이 됐다는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성무 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하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뒤늦게 잘됐다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되면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태호 위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어차피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보류시켜 가지고 판단을,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이것 두 가지만 보류를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글썄, 저는 말씀하시니까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정태호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진행이 되는데 주의를 또는 어떤 시정요구를 했을 때 오히려 사업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배준영 위원** 계약도 이루어지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시공사 선정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난 안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지역과 같이 해서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원인을 보니까 기반시설 건설공사 하다가 단독입찰이 되면서 유찰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공사가 자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구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여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담당자가……

○소위원장 유상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원칙을 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민수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뒤에 같이 들어오신 배석하신 분도 말씀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팀장 성재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팀장 성재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정책국장 천지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래 기다리셨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6번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융합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일부 내역사업은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직 방송 종사자 대상 AI 직무교육의 공공성과 정부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참여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교육과정별 자부담 기준 강화 및 교육생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육생의 책임 있는 참여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교육과정별 자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경력 적합성 및 교육수료 이후 계획의 구체성 등 교육생 선정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이게 처음에는 다 100%였어요. 다 100% 국고 지원입니까? 보니까 방송, 주로 MBC·KBS·BBS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내교육 성격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국고 100%로 하지요? 보통 자부담 조금씩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이 사업이 2025년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사업에서는 저희가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였고요. 2026년부터는 재직자의 경우에는 20% 자부담을 하고 퇴직자인 경우에는 퇴직자인 점을 감안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방송커리어 RESTART 이거는 아직도 100% 국비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올해 100% 국비로 지원 사업을……

○이종욱 위원 다른 건 20% 했는데 이거는 왜 100%, 안 바꿨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퇴직자인 점을 좀 고려해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종욱 위원 이건 퇴직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없거나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없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좀 인정을 하는 걸로,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얼마로요, 몇 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다른 사업하고 비슷하게 한 20% 정도로 그렇게……

○이종욱 위원 추경에 10억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몇 억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금년에도……

○이종욱 위원 10억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같은 사업…… 동일합니다.

○이종욱 위원 내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내년에 좀 깎여 가지고요. 한 8억

정도 지금……

○이종욱 위원 8억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 직군의 교육훈련보다 굉장히 전문화된 특정 기업 맞춤형 교육이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의, 개인 자부담보다도 기업 부담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AI기 때문에 상당히 특화된 교육이고요. 고도화된 장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종욱 위원 뭘 하기가 어려워요. KBS·MBC가 몇 억 없어 가지고 무슨……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 이상은 자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실제 교육생 모집 자체가 불가능하고 특히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강력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교육기관들, 여기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재취업이든 직업훈련이든 이런 것들에서 자부담이 높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하고자 했던 그런 취업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부담을 하고 굳이 정부 사업에 할 만한 요인이 좀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AI라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굉장히 받고 싶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부담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예산 당국에서 나와 계시는데, 기획예산처하고 또 재경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여튼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중에 AI를 머리말로 달고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AI가 꼭 필요하고 미래 산업이기는 한데 너무 묻지마 AI 식으로 계획 없이 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산하는 이런 장소에서는 그렇게 심사하고 넘어가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실 때는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글썄 이 예산을 보니까요 AI 방송직군별 역량강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방송 AI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인당 2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 그만두신 분인데 이걸 또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AI로 고도화되는 산업에 빨리 적응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는 250만 원으로 하고 이미 60이 넘어서 은퇴한 사람, 방송계는요 중도 은퇴하는 사람 없어요. 60 넘어서 은퇴해서 2차 사회생활

하는데 이분들한테 500만 원을 교육비를 책정한다는 것, 이것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해도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2배를 주고 이게 합리적 예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그걸 전액 국비로 다 줘요? 거기서 무슨 특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40명은? 이거는 대학등록금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원 액수를 보니까 이래요.

○**朴芝源** 위원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정 기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40시간을 하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40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다음에 이게 1인당 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게 교육 대상 인원이 직군별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471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RESTART, 퇴직자는 44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이 1인당 해서는 많이 드는 걸로 나타나서 교육비가 조금 높은 걸로 나왔고요. 나머지 강사료라든지 교육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만 1인당 교육비가,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높게 평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장비 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보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봅시다.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인데 미디어 특성화고 고등학생 미디어 특강, 대학교, 훈련자?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 뒤에 설명된 내용이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 산학계 현임, 미디어센터 이런…… 강의를 하는 거네요, 여기 학교 가서? 그런데 웬 500만 원이 필요해요?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인데 이분들이 전문가인가 보지요? 훈련자들이 무슨 강의를 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계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또 다른 강사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교육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다 한 건씩 하는데, 나눠서. 이 사람이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각자 한 번 강의하는 게 26년 5월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뭘 했던 모양인데 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건씩 강의를 했어요.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쓰고, 예산 이게 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문가로 만들었으면 그중에 전문가가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 강의 활동 연계된 것 보니까 26년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위해서 5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복지 예산입니까?

○**김성희** 위원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여기 이 자료, 이것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지요? 그래서 이 강의 들은 사람이 ‘고O미 AI 방송미디어 특강, 전남여자상업

고 백O철 AI 방송미디어 특강, 군포e비즈니스 고……’, 이것 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지요?

○김성희 위원 자꾸 뒤 보지 마시고 앞에서 답변해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여러분이 설명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500만 원씩 40시간을 쫓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돌아가서 한 명 한 명당 이 사람들 강의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선해 준 모양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걸 저희가 알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것 현황 파악……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어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개인이 가서 강의합니까?

○배준영 위원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 보세요. 누구 없어요? 내용을 모릅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해 놓고 RESTART 지원을 해서 한 게 결국 한 명이 1년 동안 강의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 2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얘기에요?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우리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한번 보세요.

○김성희 위원 누가 답변할 사람을 불러 보세요, 모르겠으면. 방미통위 딱 2건 있는데 2건 숙지 안 해 오셨어요?

○소위원장 유상범 AI 방송직군별 역량강화는 각각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강화하는 수업을……

○김성희 위원 앞에 앉아 계신 분 성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부위원장 고민수입니다.

○김성희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제가 이 자료는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2건인데 그러면 거기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 제도가 지금 여러분이 설명한 것은 이 사람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500만 원이라는 국고를 전액 보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취업을 했다는 현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개개인이 어디 가서 그것 들은 것 가지고 강의 한번 하는 것을 성과라고 여러분이 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획예산처, 2027년에 이 예산 또 들어가 있어요?

○이종욱 위원 아까 8억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8억.

○소위원장 유상범 7억인데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 예산 또 들어가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올해 예산이 10억 중에서 8억이 재직자고 퇴직자가 2억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8억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유상범 퇴직자는 빠졌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시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8억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재직자 위주로 해야 되지 않

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태호 위원 아까 답변하신 분, 얼굴이 안 보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정태호 위원 이 교육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재직자들 대상으로는 PD, 기자, 기술인, 직군 공통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디어 제작이라든지 LLM을 활용한 방송기획 업무라든지와 AI와 관련해서 실제 방송 현업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교육입니다, 이것은.

○정태호 위원 아까 강의가 몇 개라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지금 직군별 강의는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뉘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강의로 방송커리어 RESTART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퇴직자들도 강의를 듣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재취업을……

○정태호 위원 교육을 받는 건데 몇 번의 강의를 받느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게 40시간 강의입니다.

○정태호 위원 40시간 받는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40시간 동안……

○정태호 위원 그러면 몇 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5회입니다. 40시간을 5회 받고요. 방송영상 기술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AI 기반 융합콘텐츠 제작 실습……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송 환경·기술 변화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주로 실습입니다. 그리고……

○정태호 위원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방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은퇴자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가는 거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정태호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지원이 있는 거예요? 아까 500만 원이라는 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이게 1인당 지원이 된다고보다도 이 사업비가, 전체 인원을 교육하는 데 든 사업비를 1인당으로 나눴을 때 그게……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사업비 규모가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 수로 나눠 보니 1인당 이 정도의 혜택이 간다라는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리고 아까……

○**정태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제가 얘기를 듣고 보면 마치 1인당 500만 원씩 그냥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렇지 않고 2억을 44명으로 나뉘었을 때 450만 원 풀이다라는 건데요. 이 사업이 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장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듣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간 확보와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도 새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런 비용을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사람 숫자로 나눠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이 간다라는 취지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 들어 보면 마치 한 사람한테 무슨 500만 원 그냥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교육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500만 원이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총교육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1인당으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고요. 장비·소프트웨어 임차료가 전체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대충 몇 % 정도 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2억 중에서는 장비·소프트웨어 임차 등 임차료가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3400만 원, 교육 운영비가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억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문 커리어를 살려 가지고 전문강사 멘토를 하겠다고 해서 1인당 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6년에 이분들이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 투자한 게 이것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6년 7월까지 한 번 정도 대부분, 어떤 사람은 두 번. 이런 강의 한두 번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에요.

○**김성희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고 나면 뭐가 될 거라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블로그를 찾아봐도,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블로그를 보면 ‘열정의 무대로! 방송·미디어 인생이었던 당신, 새로운 무대를 펼쳐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강사를 주로 하라고 여기에 써 있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60세가 넘는 분이 재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강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강의 알선도 해 준다고 블로그에 나와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배준영 위원** 거기 들어오신 분 누구신지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시지 못하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김성희 위원** 딱 두 건 걸린 건데 그 내용은 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누구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방미통위 디지털방송미디어 정책과장입니다. 담당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목적은 AI 디지털을 사용한 방송·미디어 AX 혁신 부분에 좀 더 강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중에 퇴직자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풀을 좀 넓혀 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쓰신 거에 보면 ‘방송 분야 전문강사, 컨설턴트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500만 원씩 들여서 양성한 사람들이 방송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거나 컨설턴트로 양성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신 한 차례 강의한 건 그렇게 하는 강의의 시작으로, 과정을 처음 했으니까 과정을 마치고 나서 한두 차례씩 강연한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소개한 것뿐이지 저 강의 한 번 하는 데 500만 원 쓴 것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취업이 아니라, 여기 써 있지만 방송 분야 전문강사랑 컨설턴트 이 사람들이 나이를 드셨고 방송 협업에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AI까지 더해 가지고 방송, 유튜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방송하겠다는 고등학교 애들 모아 놓고 강의해 주고, 이런 자원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사업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렇습니다. 멘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좀……

여기 보니까 ‘우수 교육생은 강사 기회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게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위탁하네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전파진흥협회는 2억입니까, 예산이? 전체 예산 2억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전체 예산은 10억이고……

○이종욱 위원 전파진흥협회의 역할이 뭐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전파진흥협회가 교육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직접 교육은 누가 해요,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전파진흥협회가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 교육 과정 전체를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전파진흥협회가 용역을 발주했어요, 1억 4500. 방송 커리어 리스타트 지원 용역. 실제로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거 같고 5500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먹었고 1억 4500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맞아요? 조달청에 입찰공고 돼 있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장소 이런 것들 운영 때문에, 장소나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입찰을 한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RAPA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나마도 40시간, 5회도 아니고 월수금 강의해 가지고 4시간씩 총 20회 강의를 하네요.

○정태호 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런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경력자들이 어딘가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해 주거나…… 어차피 방송문화기술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흐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누군가가 교육이 필요한데 그 경력자들이 그런 데 가서 얘기하면 훨씬 더 교육 효과는 높겠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지금 특성화고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소 방송사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그래서 이게 이제……

○정태호 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예, 25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지금 26년도 상반기 중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를 모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정도 성과가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이분들은 이제 컨설턴트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현직에서 유능한 사람 훨씬 많은데 젊은 친구들, AI는 젊은 사람 중심인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까지 충분하게 얘기도 듣고 정리가 돼서 그런데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정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기관에서 나오셔서 가지고 아무래도 여당은 정부 입장에서 가능하면 방어를 많이 해 주려고 그러는데 정부 쪽에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난 지금 이 상황만큼 준비돼 있지 않는 정부 측 자세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안이 여러 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두 개 있는 거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해 와 가지고 아무 말씀도 못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봐서 겨우 답을 찾아야 되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정부로서는 창피한 일이에요. 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를 해 주시지요.

○朴芝源 위원 사업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부담을 그동안에 지우지 않다가 일부 강의를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우고 있고 앞으로도 자부담을 추가적으로 지우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배준영 위원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으로 가자는 거지요?

○이종욱 위원 저는 제도개선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자부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고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고 해서 시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하시고 나중에 간사님 웹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많은 정부기관을 봤습니다만 이것 같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0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팩트체크 활성화는 2024년 사업 종료 이후 2026년부터 재추진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후평가 없이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종료에 따른 정책 효과 및 정책 공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산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저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정책적·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27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성과지표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어서 결산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이 뭐지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방미통위가? 누가 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한 번 끊겼지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2025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2025년에 중단됐다가 2026년에 다시 반영을 했는데 또 사업은 확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예산 숫자로 보면 2024년은 2억, 3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억 5700 맞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떤 내용이 확대됐습니까, 성과평가도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는 팩트체크, 그러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 전문가가 이것이 팩트인지 허위사실인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 형태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참조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요새 법 고친 허위정보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망법 개정 내용을 보시면 망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10월 1일부터 투명성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명성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팩트체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명성센터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팩트체크 활동에 대해서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욱 위원 투명성센터에서 이쪽 팩트체크에 지원한다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확인 단체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욱 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서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예산은 그대로 있고.

내년에 6억 5700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이게 올해가 6억 5700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팩트체크 활동하는 부분은 없어지고요. 투명성센터 쪽으로 통합됩니다.

○이종욱 위원 통합되면서 더 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게 내용적으로는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요? 맞지요? 있던 사업이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떤 성과평가나 왜 없어지고 왜 살아났는지…… 어차피 정권은 바뀌었지만 방미통위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이종욱 위원 방미통위가 중심을 잡고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질 때는 왜 없어졌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왜 살아났는지, 성과평가가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 봤어요. 서면답변도 받아 보고 했는데 그냥 두리몽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특히 요즘 허위정보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도 많고, 그렇지요? 팩트체크인지 선별적인 그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팩트체크 할 수 없잖아요, 미디어재단에서. 그렇지요?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게 걸리는지, 걸려서 어떤 조치와 고소·고발이라든지 법적 조치랑 연결이 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질문 좀.

부위원장님, 최근에 위원장님이 빠떠에 가서 사과하셨지요? 사과하신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사과는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관계자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과거에 처분했던 내용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김성희 위원 과거의 처분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오늘 지금 결산을 안 한다고 야당 위원이 지적하시니까 어떤 부분을 사과했는지를—이거야말로 팩트체크네요—사실 관계를 좀 알려 주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과한 부분은 빠뜨가 예전에 이 동일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김성희 위원** 거기가 운영했던 게 팩트체크넷이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맞습니다. 팩트체크넷을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서 팩트체크 활동들을 했는데 당시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김성희 위원** 당시가 언제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작년이었습니다. 2025년에 감사를 통해서……

○**김성희 위원** 감사를 시작한 게 누구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작했었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누구 위원장일 때 하셨냐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감사 시작은 이동관 위원장님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동관 위원장 때 감사를 했는데 인건비 횡령 등으로 한 거였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당시 감사에서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됐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김성희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됐지요, 결론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래서 보조금 교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서 지금 팩트체크 사업이 망가졌던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형태로 재단으로 넘겼던 거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재감사를 했었고요. 재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도 취소하고 빠뜨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 게 아니라 이동관 방통 위원장이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누명을 씌워 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해서 결국은 한 시민단체가, 이게 시민단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팩트체크를 하던 SNU부터 포함 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조해서 하던 팩트체크 시장 자체를 붕괴를 시켰었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그런 인건비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게 확인돼서 최근에 방미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서 종료한 게 아니라 누명을 씌워서 강제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팩트체크 사업을 방미통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추진하시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팩트체크 사업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료되는 과정이 매우 부당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종료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지금 사후적 평가가 없지 않았고요. 이미 방미통위가 공식적으로 해당 기관에 사과까지 했으니깐요 그것이 저는 평가였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좀

객관적으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김성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김성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기관 으로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제출하고 재개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25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이 없어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언론사 플랫폼 이용자 공동체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팩트체크 사업이 실제 허위정보 감소에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사회적 피해가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무엇인지, 적어도 정부기관이라면 이런 정도의 보고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없어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써져 있기는 제도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시정을 요청합니다.

○김성희 위원 죄송한데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2021년도 방통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그 당시에 169건 업로드 했었지요? 팩트체크 교육생 수 강도 1400명이나 해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IFCN, 인터넷서널팩트체크네트워크에 우리나라 유일 단체로도 가입하고, 이게 빠띠 같은 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한 일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는 사실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제가 설명하게 하지 말고.

○소위원장 유상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국정감사로 가 가지고, 특정 팩트체크와 관련돼서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사과하고 전 정부에서 한 것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이렇게까지 가면 결산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분명히 또 이와 관련돼서 사업을 재개하려면 적어도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적·합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권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그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와 관련돼서 배준영 위원은 시정 그리고 다른 민주당 위원님들은……

○朴芝源 위원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

○김성희 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돼서 하나만 딱 지적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서 사과와 뜻을 전한다’, 위원장이 사과했는데요? 가서 전달한 건 당연히 했겠지만 사과의 주체가 위원장인 건 맞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 거냐라고 물으신 줄 알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이 사과한 건입니다.

○**정태호 위원** 잠깐만요.

아니, 팩트체크를 다시 하기로 했으면, 재추진하면 그동안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조금 전에 경과 사항을……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다 들었고 김성희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시정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정, 제도개선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저희가 그런 경과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이 폐지됐다가 26년부터 재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재정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책적·실증적 연구분석이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정태호 위원** 그 점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고민수** 예.

○**이종욱 위원** 기록을 위해서, 저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종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쪽과 여야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제도를 살릴 때는 최소한 그래도 이런 쪽에 긍정적인·사회적인 역할 성과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종래에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런 논란 중심에 안 서도록 제도나 기관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조금 보여 달라는 거지요.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가 4년 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김종철 위원장의 사과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오니까 위원들 사이에 불편한 감정과 더불어서 정부 위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위해서 5분만 정회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박진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박진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같이 오신 분들은 간단히 인사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장현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장현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감시대응팀장 공병문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감시대응팀장 공병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거기는 여권이 강하네요, 원자력안전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통합성·활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의 정점별·시점별 공개를 지속하는 한편 오염수 방류 이후의 분석 결과를 연도·정점·분석유형·핵종별로 종합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활어차 분석 결과의 연도별 검사 건수, 현장·정밀 분석 결과 검출 여부 등을 누적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주요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와 설명자료로 안내하는 등 축적된 검증 데이터가 실질적인 국민 불안 해소와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요구유형에 시정, 제도개

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방사능 감시 결과를 정점별·시점별로 상세히 공개를 하고 있으며, 지적 주신 내용대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석 결과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없고, 동 지적사항은 정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공개하라는 취지이므로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년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렸지만 이후에도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저희가 궁금했고, 일부에서는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면 2~3년 정도 걸린다니까 지금 그 시기가 이미 도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가 강화·옹진 이쪽입니다. 그래서 당시 핵오염수 때문에 정말 어촌이 초토화가 됐어요. 정말 어민들하고 어촌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해 갖고 정말 너무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청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클린하다는 것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 오염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애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서검도에 서 우라늄 검출 양이 일반 검출 양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해수를 조사했는데, 원안위하고 그때 해수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보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거기가 위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총리한테도 얘기하고 원안위 위원장님한테도 해서 그것을 언론에서 이끌어 내서 겨우 설명을 했거든요.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결과만 나왔다고 그냥 가만히 알고 계시고 정부 게시판에 붙여 놓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바다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도 제도개선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朴芝源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해서 현재 원안위에서 계속 그것을 정밀검사를 다 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매년 그 분석 결과를 보도는 하는 것으로 기억해요, 발표는 한 걸로 기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매년이 아니고요, 방출하는 시점마다 저희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점검을 하는 시점마다 월 1~2회를 하는 것도 있고, 핵종마다 좀 다른데요 그것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 부분이 흡족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걸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여 가지고 저도 수산물시장 가서 온갖 수산물 같이 사 먹고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운동을 벌였던 것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 방류 후에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 검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한 20억 이상 쓰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현재까지 일관되게 WHO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돼 있고 활어차 현장분석은 4년 연속 전건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원안위에서 국민들에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 부분도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 위원님께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하셨고 해류가 돌아서 다시 오는 시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만하고도 협력을 해서 대만이 측정하는 자료들도 조금 더 받아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아니요, 아까 해류가 돌아오는 시점을 위원님께서 2~3년이라고 하셨는데 돌아오는 게 5년 이상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시물레이션을 하는 데가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국내 시물레이션은 믿지 않더라도 가장 과학적으로 발달된 미국이랑 유럽 쪽에 시물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거기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가 5년 이상으로 독일에서 한 시물레이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5년 이상으로요. 이제 벌써 4째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 결과를 해서 그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의 적합성을 아주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차피 지금 더 이상 의미 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쳐 보는 게 어떨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중국에도 발전소가 있고 다른 데가 있어서 해양방사능 감시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유 업무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생기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부분입니다.

다만 후쿠시마 방류 이후에 정점이 일부 추가되었고 활어차 해수 정밀분석이 추가된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 해양방사능 감시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도 있고 해수부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도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다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검증은 하고 나면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해당 사업을 같지 안 같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지요. 그것까지도 눈치 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면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1994년이었지요, 소련이 오호츠크해랑 동해에다가 방사능물질을 던지면서부터 저희가 감시를 시작을 했고 마흔 군데지요,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근해하고 원해에 관련돼서 데이터가 아주 잘 축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올해 WHO의 식용수 기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완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망은 잘 설치가 돼 있다. 어느 순간에라도 여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원안위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방어가 철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해류가 들어올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을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원안위가 아주 긴 시간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하와이대학의 교수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해양생태계에서 생물이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흘러가는 문제와 별개로 해양생태계에서의 방사능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와이주립대의 리치먼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ALPS를 직접 살펴보신 분이기도 하고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신데 해양생물의 방사능 문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잘라서 끝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앞으로도 잘하시고 국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알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더 안 나갔지요? 여기서 스톱?

○김성희 위원 예,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결산심사답게.

○소위원장 유상범 결산심사에서 멈추는 정도로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견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정 요구를 하는 배준영 위원님 계시고 김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이종욱 위원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정태호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이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냥 되면 보류하고 넘어가고……

○배준영 위원 아니, 제도개선으로 제가 시그널은 명확하게 드렸으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는 것으로 하셔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우주항공청 차장직무대리 권현준입니다.

○우주항공청기획조정관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장홍태입니다.

○우주항공청기획재정담당관실 권현미 우주항공청 권현미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진척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교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경우 전년도 이월액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교부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우주항공청에서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 실시계획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건축과 장비 발주가 들어가면서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나중에 잘할 테니까 과거에 문제된 것은 가볍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결국 예산이 계속 이월됐다는 건데요. 2024년에도 사실상 11월 12월 이때 대부분이 이월됐는데 2025년 예산을 그런 것을 예상하고도 전액 교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72억 거의 대부분이 다시 다 이월됐어요. 그래서 집행 기간을 장기간 방치되게 한 그런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전년도 이월액이 많든지 집행이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을 주는 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무 고려도 없이 그냥 있는 예산 전액 교부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혈세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朴芝源 위원 이게 개청이 언제 됐다고요?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저희가 24년도 5월 27일 날 됐습니다. 그때 개청될 때 조직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행정인력들 저희가 지금 본부가 한 250명 되는데요 그 당시 한 삼사십 명 인력으로 시작이 됐고 개청되면서 사람을 계속 충원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들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전문직 임기제분들이 50% 이상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다른 부처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시간이 걸렸더라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올해도 이월이 많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감액하십니까?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중기계획에서 742억인데요 250억으로 줄여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朴芝源 위원 많이 줄이시네요.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예.

○朴芝源 위원 초기라서 아마 운영 미숙 내지는 그런 인력 문제 같아서 저도 주의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욱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그러면 이제 시정으로 들어가야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현재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이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실행률이 저조한데 각 내역사업의 성과목표는 모두 달성한 걸로 평가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산은 실행이 안 됐는데 내역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면 이걸 도대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저희가 23년도에 예타 면제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나서 24년도에 적정성검토가 있었고요. 그 적정성검토가 거의 연말 돼서 끝난 상황이었고 적정성 끝나고 나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할 때 24년도 끝에 적정성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소위원장 유상범 24년 말에?

○우주항공청차장직무대리 권현준 예.

그래서 실제로 예산 교부된 게 24년 12월에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집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그때 세운 기본 평가지표가, 그때 적정성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지표를 기본계획 수립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했기 때문에 100% 달성으로 하는 평가지표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실 때 지적받은 이유를 잘 보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차이가 명확해…… 이걸 누가 봐도 이 지적을 보면, 이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그 부분은 쪽 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추가질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의라는 이종욱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박 위원님도 주의 의견이신데 다른 분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정태호 위원 아까 제도개선 얘기하시지 않았나?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라고 그랬는데.

○정태호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를 봤으므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익숙지는 않으시겠지만 지적사항을 보시면서요 꼭…… 내가 보니까 많은 정부 부처 사람들이 지적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랬더니 설명을 해 주시니까 또 납득이 되잖아요. 그걸 미리 설명하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11시에 개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성희 朴芝源 배준영 유상범 이종욱 정태호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윤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국고정책관 허승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정책기획관 홍인기

축산정책관 이재식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해양수산부

차관 남재현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기획예산처

차관 조용범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박현희

우주항공청

차장직무대리 권현준

기획조정관 장홍태

농촌진흥청

차장 김상경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차장 임하수

기획조정관 임영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임명길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민수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미디어진흥국장 천지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박진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기획국장 김인수